

발간 등록 번호

11-B190031-000197-08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20 NO. 2



Post COVID-19 Green Recovery: EDCF에의 시사점
아세안 중점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여건과 시사점
물 시장에서의 ODA 자금과 기후금융의 동향 및 시사점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20년 제2호

한국의 개발협력

발행 : 2021년 3월

발행인 : 방 문 규

발행처 : 한국수출입은행

편집인 : 박 종 규

주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화 : 02-3779-6114(대표)

팩스 : 02-784-1030(대표)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국제개발협력 동향

- Post COVID-19 Green Recovery: EDCF에의 시사점 3
(강경재 한국수출입은행 경험평가부 선임연구원)

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 아세안 중점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여건과 시사점 35
(임소영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
- 물 시장에서의 ODA 자금과 기후금융의 동향 및 시사점 61
(김자겸 평화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부 부사장)
(김승현 경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손진식 국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III.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85
(안영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135
(이주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

EDCF

I . 국제개발협력 동향

Post COVID-19 Green Recovery: EDCF에의 시사점

강경재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평가부 선임연구원

Post COVID-19 Green Recovery: EDCF에의 시사점

강경재

한국수출입은행 경험평가부 선임연구원

목 차

- I. 서론
 - II. COVID-19가 개도국 발전에 미친 영향
 - III. COVID-19 대응을 위한 개발금융
 - IV. Post COVID-19 복구: 녹색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 V. EDCF와 기후변화대응
 - VI.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1. 서론

COVID-19는 2020년 12월 10일 현재 68,165,877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1,557,385명의 사망자를 내었다(WHO COVID-19 통계, 2020.12.11. 접속). COVID-19의 영향력은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과 마찬가지로 생명 손실과 함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를 세계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6.4%~9.7%에 해당되는 5.8조~8.8조달러로 추정하였으며(ADB 2020), 세계은행은 1998년 이후 최초로 COVID-19 사태로 인해 극빈곤층이 9천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World Bank, 2020), 빈곤층의 증가와 함께 소득계층간, 남녀간 불평등 역시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Adams-Prassl et al. 2020; Furceri et al. 2020). 이러한 COVID-19의 악영향은 이미 지연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달성을 더욱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Leal Filho 2020; Shetty 2020; UN 2020a, 2020b).

현재 각국은 COVID-19 사태에 대응하면서도 COVID-19의 악영향에서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전례 없는 경제·사회적 손실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COVID-19가 영향을 미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잘 조율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가 향후 새로운 인프라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Post COVID-19 복구 방향은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이라는 모토 하에 녹색 회복(Green Recovery),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더 나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COVID-19가 개발도상국 발전 및 공여국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Post COVID-19 녹색 회복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논의가 EDCF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COVID-19가 개도국 발전에 미친 영향

앞서 기술한대로, 개도국의 발전은 COVID-19로 인해 현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Leal Filho 2020; Shetty 2020; UN 2020a, 2020b).

2016년 출범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모니터링 결과 COVID-19 사태 이전에도 목표 달성정도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SDG 1번 목표인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의 2018년까지의 진행 속도를 분석한 결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율이 여전히 두 자릿수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나타나,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UN 2019).

SDGs의 달성지연은 COVID-19에 의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COVID-19가 SDGs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2020년 SDGs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빈곤인구가

늘어나 약 7,100만 명의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분류될 것이며, 실업으로 인해 약 16억명의 근로자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어려움, 식량 부족 등과 함께 COVID-19로 인한 의료인력과 시스템 과부하로 영유아 및 산모 사망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봉쇄조치로 인해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가정내 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아, 학교 폐쇄로 인해 국가 간, 국가 내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과 함께 학교를 통해 아동에게 제공하던 학교 급식 역시 중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극빈인구의 증가와 함께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 사회의 아동이 아동 노동, 아동 결혼 및 아동 인신매매의 위협에 노출되게 하고 있다. 이로써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빈곤인구의 증가, 소득의 감소, 아동 노동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UN 2020a).

〈표 1〉 COVID-19의 SDGs 달성에 대한 영향

SDGs	COVID-19의 영향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소득감소 및 취약계층의 빈곤 증가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식량생산·유통 감소로 인한 식량 접근성 저하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 웰빙 증진	COVID-19 감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 또는 사망, 의료 시스템 과부하, 다른 질병의 악화, 고립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 발생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학교 폐쇄로 인한 교육기회 상실, 원격 학습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불충분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원격 학습이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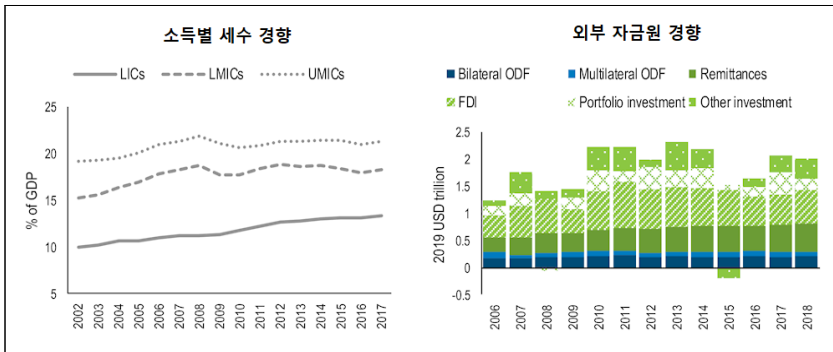
SDGs	COVID-19의 영향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여성의 경제적 활동 둔화, 여성의 무급 돌봄 증가,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 여성이 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COVID-19에 더 많이 노출
6. 모두를 위한 물·위생설비의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 보장	깨끗한 물에 대한 공급 중단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COVID-19 예방 조치 중 하나인 손 씻기 저하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	전기 공급 부족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기에 대한 접근성(access) 저하.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 대응 및 역량 약화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경제 활동 중단 소득 감소, 노동 시간 감소, 일부 직종 실업 증가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를 심화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빈민가의 경우, 높은 인구 밀도와 열악한 위생 조건으로 인해 COVID-19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 행동에 대한 기여 감소; 반면 생산 및 운송 감소로 인해 환경에 대한 영향 역시 감소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분쟁 심화, 국내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타국에 전가, 분쟁으로 인해 COVID-19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방해, 분쟁지역은 COVID-19의 악영향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인한 파트너십 약화, 국가주의 강화 공중 보건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 대두

자료: Leal Filho (2020), UN (2020b)으로부터 재구성

유일하게 긍정적인 효과로는 SDG 13. 기후변화 목표와 관련하여 생산 및 운송 감소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들 수 있으나, 향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후 행동에 대한 기여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기후변화 대응 목표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

이처럼 COVID-19의 여파로 인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부분의 개발 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도국의 경우 이를 COVID-19 이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SDGs 수립 시, 144개 개도국에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8~30억 달러가 2030년까지 매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2016), 개도국 자체 재원은 경제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아직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공적원조 재원 역시 부족하여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은 이미 COVID-19 사태 이전부터 2.5조 달러의 간격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상태였다(OECD 2018a; Shetty 2020). 향후 Post COVID-19 복구의 방향성과 재원은 SDGs의 달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ODA 대상국가의 COVID-19 이전 세수 및 외부자금원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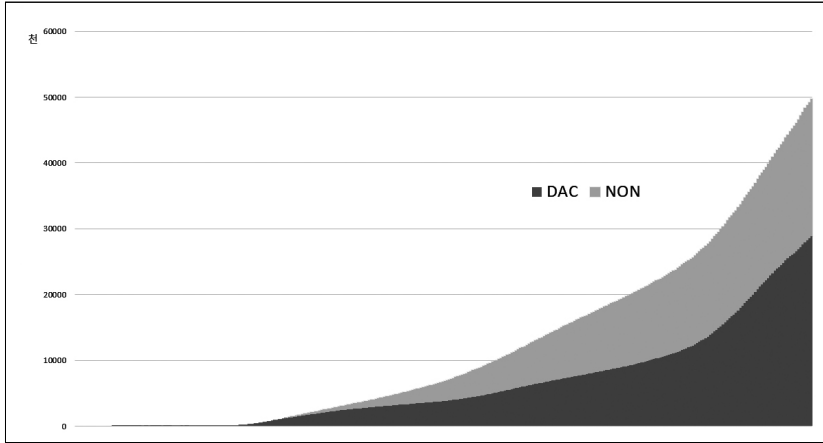
자료: OECD(2020a)

III. COVID-19 대응을 위한 개발금융

COVID-19의 악영향을 극복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COVID-19는 거의 대부분의 공여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근시일 내에 원조액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 내 DAC 회원국들의 COVID-19 누적확진자 수는 지역 확진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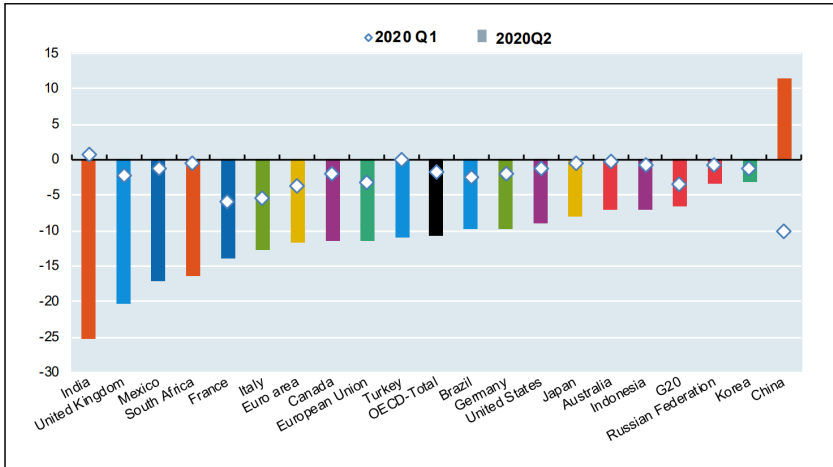
〈그림 2〉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 내 DAC 회원국과 비회원국
누적 확진자 수(20.1.3~12.9)



자료: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로부터 재구성.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산량 감소,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GDP 변동을 살펴보면 2020년 1분기 대비 2분기에는 영국 20.4%, 프랑스 13.8%, 독일 9.8%, 미국 9.1%, 일본 7.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0b).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은 2010~2018년간 DAC 양자 ODA의 72%를 차지하는 중요 공여국으로,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인 타격은 향후 양자 ODA 규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 주요국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



자료: OECD (2020b)

선진국의 경제적인 타격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개도국으로의 FDI는 2019년 대비 약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UNCTAD 2020). 또한 OECD는 2020년 수원국으로의 외부 민간재원 유입 규모는 2019년에 비해 7,000억 달러가 감소하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때보다 더 큰 감소 폭이라고 추정한다(OECD 2020a).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원조는 2008년 경제위기 극복 때와 마찬가지로 수원국에게 위기극복과 장기 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OECD 2020a). 예를 들어 Adam, Henstridge, Lee 등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들은 외부재원 유입 없이 COVID-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민간 금융시장에서 외부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만큼 공적 개발금융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주장하였다(Adam et al. 2020).

공여국들은 자국 내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적원조 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OECD DAC 2020). 2020년 공적 개발금융은 개발도상국의 COVID-19 관리, 사회·경제적 영향의 극복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는 프랑스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의 “COVID-19 Health in Common”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원국의 공중보건 정책, COVID-19에 영향을 받은 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비상지원기금, 세계백신 면역연합 앞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식량 안전보장, 난민거주지 안정화 등 보건 관련 지원과 함께 글로벌 공급체계 유지, 수원국 내 주요 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EDCF 2020; van de Poel 2020).

〈표 2〉 주요 공여국들의 COVID-19 대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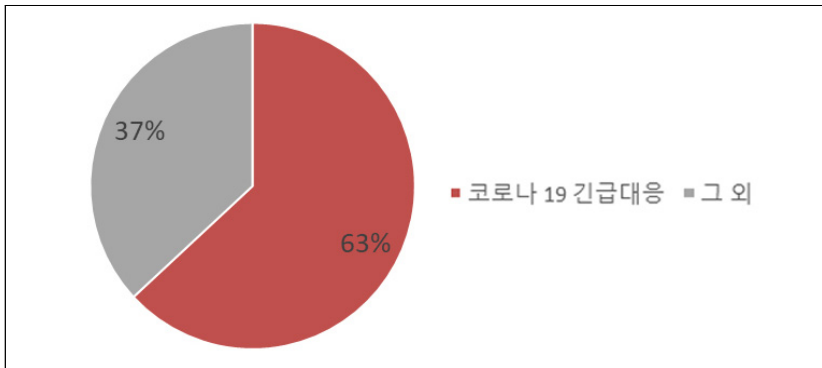
공여국	지원 내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억 유로 규모의 “Covid-19 Health-in-Common”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여 프랑스 개발 협력 정책에 따른 중점협력국 우선 지원 - 10억 유로의 유상원조 및 1.5억 유로의 무상원조 - 무상원조 지원: 아프리카 국가의 전염병 감시 네트워크 강화 및 COVID-19 대응 계획 수립 지원, 프랑스계 NGO, 협회, 재단, 연구소 등 시민사회 지원,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

공여국	지원 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BMZ의 원조 예산을 재편성하여 11.5억 유로 규모의 'COVID-19 긴급 대응 프로그램' 재공 - 보건 및 유행병 컨트롤, 식량 안보 및 기초적 식량 서비스, 취약 지역 안정화, 사회적 보호, 민간 주요 부문(방직 및 관광 산업), 정부 유동성 공급 및 국제 협력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9억 달러 규모의 IMF, WBG, UN 지원 • JICA의 경우, COVID-19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차관 계약 예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ID에 7.44억 파운드 규모 - 1.5억 파운드의 재난 억제 및 경감기금 - 3.44억 파운드 규모의 백신 개발, 치료 및 검진 키트 지원 - 개발도상국에서의 감염 확산 억제를 지원하는 영국계 구호 단체 및 국제기구에 2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액 배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ergency health funding 1억 달러 •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중 USAID에 9.9억 달러 할당 -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COVID-19 발생으로 인한 국제 재난 지원, COVID-19 발생으로 인한 경제, 안보 안정화 노력 지원을 위한 ESF(Economic Support Fund) 등을 지원

자료: EDCF (2020), van de Poel (2020)

EDCF는 2020년 승인액 중 약 63%를 COVID-19 지원에 사용하였으며, COVID-19 검사 및 치료를 위한 보건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2020년 지원분야 중 보건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EDCF의 2010~2019년 지원분야에서 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이며, 2020년 지원 형태는 COVID-19가 야기한 공중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 2020년 EDCF 지원 내용 (20년 1월~11월 말)



공적 개발금융을 통한 COVID-19 지원은 크게 COVID-19 감염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가정·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있다(EDCF 2020; van de Poel 2020). 이러한 지원을 위한 재원은 새로운 예산이 아닌 기수립 예산을 재편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제공한 “Global Response to COVID-19”의 경우 새롭고 추가적인(new and additional) 예산이 아닌 기존의 원조 예산을 COVID-19 대응에 사용하도록 변경한 것이다(van de Poel 2020). 이러한 예산 변경은 자칫 필요한 개발활동에 재원이 지원되지 않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SDGs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주요 과제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뜻한다(van de Poel 2020). 그러나 COVID-19 사태에서 나타난 불평등, 기후변화,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은 개발협력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환경파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성 질병의 가능성을 줄이고,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거대한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여 회복과 기후 개선 2가지 목표 모두를 이루려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Post COVID-19 복구에 있어서 더 나은 재건의 방법으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녹색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IV. Post COVID-19 복구: 녹색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Post COVID-19 복구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더 나은 재건’이다. ‘더 나은 재건’은 2004년 아시아 지진해일 재건 당시 처음 사용된 표현으로 재난 후 복구·재활·재건 단계에서 향후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프라 및 사회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다(OECD 2020c; UN 2020c). Post COVID-19 복구에 있어서 ‘더 나은 재건’의 방향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사태에 더 나은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부터 당면 개발 문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중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COVID-19의 재건 노력이 환경, 특히 기후변화와 연결된 데에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발생하고 있는 COVID-19, Ebola, HIV, SARS, MERS, Zika 등 인수공통 전염성 질병에 대한 경각심, 임박한 기후 시스템 임계점(tipping points in the climate system)에 대한 위기의식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OECD 2020d).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용어는 Thomas L. Friedman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ettifor 2020). Friedman은 2007년 1월 17일자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A Warning From the Garden”에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사용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하였으며,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시행되었던 뉴딜 정책의 이름을 빌려, 이를 그린 뉴딜이라고 명하였다(Friedman 2007). 그린 뉴딜은 산업 인프라 자체의 변경을 통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변환하는, 즉 근본적인 산업기반 자체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¹⁾’을 목표로 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2019년 12월에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정책 안에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골자로 한 그린 뉴딜을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post COVID-19 재건 논의인 녹색 회복과 맞물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COVID-19 사태 중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은 COVID-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발표되었다.

COVID-19가 미친 유일한 긍정적인 효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로, 2020년 전세계적으로 경제활동, 운송 및 여행의 감소 등으로

1)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경제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0'인 상태를 의미

약 2.6GtCO₂의 온실가스가 감소하였다(Hepburn et al. 2020; IEA 2020).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IMF 2020; OECD 2020d).

그러므로 COVID-19의 영향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전례 없는 규모의 국가정책을 시행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IMF 2020; OECD 2020a; ADB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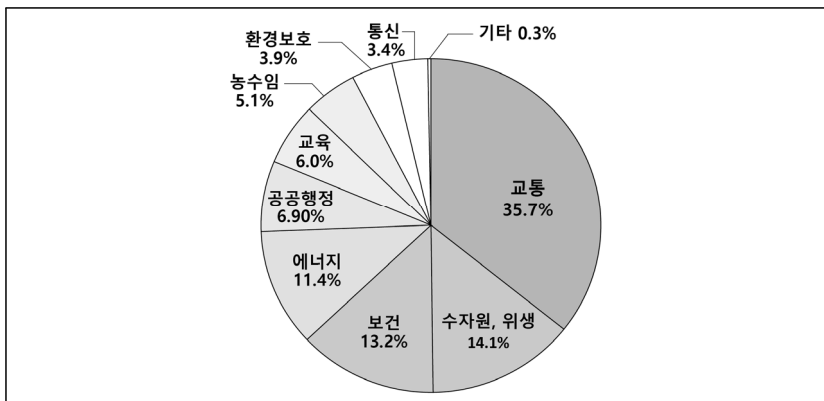
COVID-19 이전에도 기후 친화적인 발전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강조되어 왔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저배출, 기후 탄력성 경제로의 전환이 1,8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생태계 관련 서비스 업계에서 12억개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ILO 2018). 또한 기후 탄력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 1달러당 평균 수익률 4달러를 창출하여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Hallegatte et al. 2019). 한국판 그린 뉴딜 역시 같은 맥락의 전략으로, 경제기반을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여 COVID-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 등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으로 볼 때 EDCF 역시 Post COVID-19 복구 지원에 있어서 그린뉴딜과 기후변화 등의 과제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V. EDCF와 기후변화대응

앞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기후변화 대응과 이를 위한 인프라의 혁신은 post COVID-19 복구, SDGs의 달성, 그린 뉴딜의 공통된 요소라 할 수 있다. EDCF는 협력대상국의 경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외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EDCF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원분야를 간략히 분석하여,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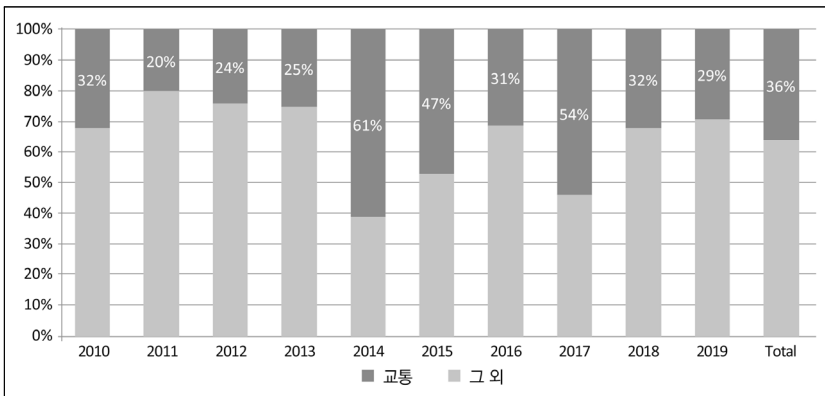
EDCF는 2010~2019년 동안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및 교통 분야에 총 지원액 중 47.1%를 지원하였다. 인프라는 직·간접적으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건설과 유지보수는 개도국 정부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강경재 2019).

〈그림 5〉 2010~2019년간 EDCF 지원 내용



EDCF 지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분야는 17개 SDGs 중 8개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향후 경제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SLoCaT 2018; IEA 2019). 2010~19년 동안 EDCF는 전체 지원액의 36%를 교통에 지원하였으나 교통분야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한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DAC 회원국들의 2010~17년간 기후변화 관련 지원 중 교통분야가 약 19%, 에너지 분야가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강경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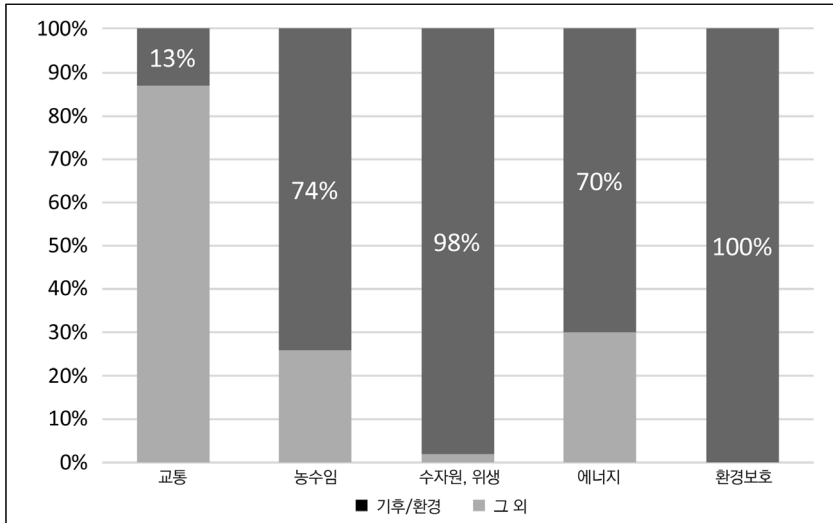
〈그림 6〉 2010~19년간 EDCF의 교통분야 지원비중 (승인액 기준)



그 원인 중 하나로, EDCF의 경우 각 분야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을 범분야(cross-cutting issue)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취급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2010~19년 동안, 주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수자원 위생분야 지원의

98%, 에너지 분야 지원의 70%, 농수임 분야 지원의 74%가 기후/환경 관련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교통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그 지원 정도가 13%로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7>).

<그림 7> 2010~19년 분야별 EDCF 기후/환경 관련 지원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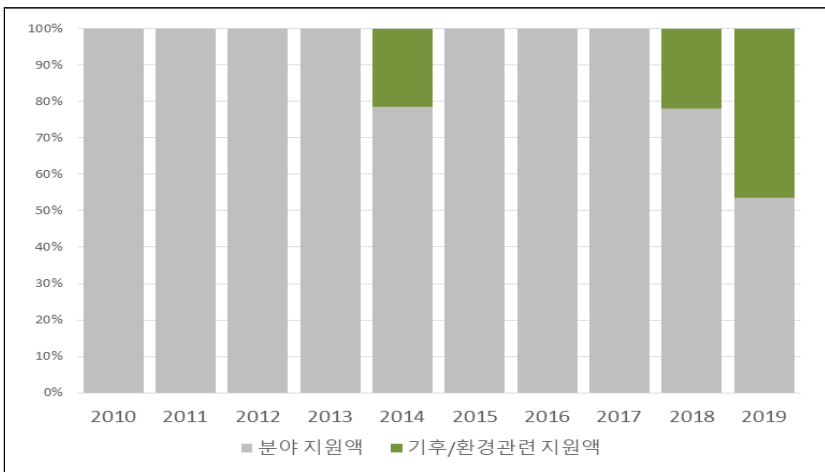


<표 3>의 사업 목록에서 나타나듯이, EDCF 교통분야 지원의 목적이 기후변화 완화인 경우, 즉 철도, 교통 시스템 지원 사업 등만이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 기후변화 지원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강경재 2019). 그 결과, 교통분야에서 기후/환경 관련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8>).

〈표 3〉 EDCF 교통분야 기후/환경 지원 사업(2006~2018)

승인 연도	국가	사업명	승인액 (백만달러)
2006	몽골	울란바타르 지능형교통망 사업	12.8
2009	방글라데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CNG 버스 구매사업	30.0
	베트남	호치민-퐁롱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30.0
2014	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업	115.0
	미얀마	철도현대화 사업	45.0
2018	케냐	간선버스 5번 전용도로 건설사업	59.0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사업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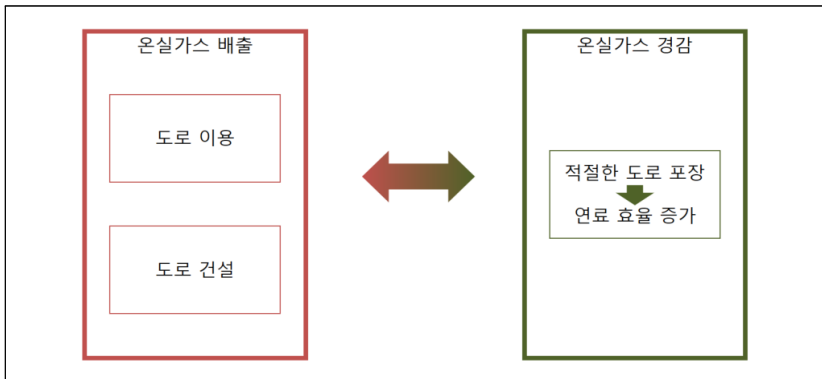
〈그림 8〉 EDCF 교통분야 기후/환경관련 지원 (2010~2019)



그러나 인프라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 기후와 상당한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기후변화는 사업 내용 중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EDCF가 지원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도로교통의 경우, 도로의 건설과 이용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프라이며,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이므로 도로 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경제발전, 더 나아가서 SDGs의 달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Escobal & Ponce 2003; Mu & Van de Walle 2011; 강경재 2019).

〈그림 9〉 도로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 가능성



정부로서는 도로교통의 완전 금지보다는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며, 수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EDCF 역시 이러한 점을 사업 내용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방안으로는 도시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 운송 업계의 효율성 제고, 자동차의 연료 효율성 개선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노면 상태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노면 상태 개선은 연료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Wang

et al, 2020). 아시아의 경우 포장률에 비해 도로의 노면 상태가 불량하고,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도로가 비포장 도로임을 감안할 때(OECD 2018b), EDCF의 도로 사업은 도로 노면 상태의 개선 및 유지보수 효율성 증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사업 시행 시 소외지역의 안정적인 교통접근성 보장과 도로의 효과적인 유지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도로 설계 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설을 갖추면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 방지 등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도로의 이용가능시간을 늘려 경제활동, 교육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는 것 역시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이 사업 선정에 반영되고, 지원 분야로 인식된 것이 2019년의 EDCF 교통분야 기후/환경 지원 사업의 경향으로, 2019년 승인된 EDCF 도로분야 기후/환경 지원 사업 4건 중 캄보디아와 엘살바도르에 지원된 2건의 사업이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 2019년 EDCF 교통분야 기후/환경 지원 사업

국가	사업명	기후변화 적응/완화	승인액 (백만달러)
에티오피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완화	63.0
캄보디아	기후탄력적 농촌인프라 개발사업	적응	57.0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	적응	80.5
케냐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 2차	완화	100.0

기후탄력적 농촌인프라 개발사업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도로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캄보디아의 국가 기후변화 전략(CCCSP, 2014-2028)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한 지방도로 인프라 개보수를 통한 지역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본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된 폭우로 도로유실, 지역고립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침수 지역 6개주에 23개의 지방도로가 주요 산출물이다. 이 도로들은 기후변화에 강한 재료원(콘크리트 등)을 사용하고, 범람에 따른 비탈면 유실이 잦은 구간은 유실방지 공법(사석공법)을 적용하는 등 여러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은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I)과 함께 협조유자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로 비탈면 붕괴 위험지역을 우회하는 교량을 건설하여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 정체 해소를 통한 연결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의 우회도로 사업과 달리, 동 사업은 지진, 홍수에 따른 도로 피해를 방지하는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사업 목적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EDCF 도로분야 사업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사업의 목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역시 심사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한 적절성을 중심으로 심사되어, 전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 도로의 건설과 이용, 타 도로

및 교통수단과의 연계, 이후 경제 활동 등 전반적인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현 정부의 “한국형 그린 뉴딜”의 반영과 향후 SDGs의 달성, Post COVID-19 복구 지원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EDCF는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대한 고찰과 함께 EDCF 지원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의 일관성 있는 반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및 시사점

COVID-19 재건에 대한 방향성은 2005년 아시아 지진해일 재건시 등장한 ‘더 나은 재건’, 2007년에 처음 거론된 ‘그린 뉴딜’ 등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확장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EDCF가 향후 그린뉴딜 정책과 COVID-19 재건,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등 여러 가지 개발협력 과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EDCF의 기후변화 대응 정도를 적응과 완화 모두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일관성 향상을 고려할 수 있다.

EDCF의 주요 지원 분야인 교통과 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핵심 분야이다. 그러나 EDCF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연구나 평가 등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은 조금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과거 EDCF 지원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자료는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방안(전시덕 2010; 정지원 2018), 또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시사점 도출(강경재 2019)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EDCF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평가로는 2017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가 있으나(KIEP 2017), 전반적인 사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보다는 대한민국 ODA 전략과 전략 내에 언급된 성과를 위주로 평가되어 EDCF의 기후변화 대응 정도, 즉, EDCF 사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정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향후 EDCF가 post COVID-19 복구와 SDGs 달성 등 세계적인 원조 흐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EDCF 지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EDCF 지원에 있어서 기후변화 일관성에 대한 정의 및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은 1990년대 초 등장하였는데(Verschaeve et al. 2016), 이는 개발협력 이외의 공공정책들이 해당 정부의 개발협력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Carbone and Keijzer 2016). 기후변화와 같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일수록, 정책, 개입(intervention), 파트너간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일관성은 2019년 새로 개정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 ODA 평가 기준에 신규 기준으로 포함되었다(OECD 2019).

일관성이 EDCF에 의미하는 바는 정책부터 개별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AFD, JICA 등 주요 공여국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7-2022 기후 변화와 개발전략(Climate and Development Strategy 2017-2022)을 통해 AFD의 모든 활동이 파리 협정과 일치하도록 할 것을 천명하였다(AFD 2017). 일본은 기후변화를 개발협력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JICA 2016),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지원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Climate Fit이라는 자체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JICA, 2019). 이와 달리 EDCF의 경우, 사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좀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DCF 지원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향후 post COVID-19 복구와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종합적, 범분야적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일관성 개념의 도입과 이의 시행방안 구축은 범분야적인 성과관리 체계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경재. (2019). EDCF 인프라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 한국의 개발협력, 2019(1), 101-128.
- 전시덕. (2010). 기후변화 관련 인도네시아 대응전략 및 EDCF 지원방향. 한국의 개발협력, 2010(3), 120-127.
- 정지원. (2018).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한국의 개발협력, 2018(3), 101-148.

해외문헌

- Adam, C., Henstridge, M., & Lee, S. (2020). After the lockdown: macroeconomic adjustment to the COVID-19 pandemic in sub-Saharan Africa.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36(Supplement_1), S338-S358.
- Adams-Prassl, A., Boneva, T., Golin, M., & Rauh, C. (2020). Inequality in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shock: Evidence from real time survey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ume 189, 1042-45.
- Carbone, M., & Keijzer, N. (2016). The European Union an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Reforms, results, resistance.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8(1), 30-43.
- Escobal, J., & Ponce, C. (2003). The benefits of rural roads. Enhancing income opportunities for the rural poor. *Documentos de Investigación dt40b*, Grupo de Análisis para el Desarrollo (GRADE).
- Friedman, T. L. (2007). A warning from the garden. *The New York Times*, 19 January 2007
- Furceri, D., Loungani, P., Ostry, J. D., & Pizzuto, P. (2020). Will Covid-19 affect inequality? Evidence from past pandemics. *Covid Economics*, 12(1), 138-157.
- Hallegatte, S., Rentschler, J. & Rozenberg, J. (2019). *Lifelines: The Resilient Infrastructure Opportunity*, World Bank

- Hepburn, C., O’Callaghan, B., Stern, N., Stiglitz, J., & Zenghelis, D. (2020). Will COVID-19 fiscal recovery packages accelerate or retard progress on climate chang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36.
- Leal Filho, W., Brandli, L. L., Lange Salvia, A., Rayman-Bacchus, L., & Platje, J. (2020). COVID-19 an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eat to solidarity or an opportunity?. *Sustainability*, 12(13), 5343.
- Mu, R., & Van de Walle, D. (2011). Rural roads and local market development in Vietnam.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7(5), 709-734.
- Pettifor, A. (2020). *The case for the green new deal*. Verso.
- van de Poel, J. (2020), *Covid-19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Eurodad
- Shetty, S. (2020). *Accelerating Progress of Low-Income Countries Towards the SDGs: Balancing Realism and Ambition in a Post-COVID-19 World*.
- Verschaeve, J., Delpitte, S., & Orbie, J. (2016). The rise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a multi-causal approach.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8(1), 44-61.
- Wang, H., Al-Saadi, I., Lu, P., & Jasim, A. (2020). Quantifying greenhouse gas emission of asphalt pavement preservation at construction and use stages using life-cycle asse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14(1), 25-34.

기관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 아시아 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
- ADB. (2020). An updated assessment of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Asian Development Bank Brief No.133, May 2020. Manila, Philippines

- 프랑스 개발청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
 - AFD. (2017) Climate and Development Strategy 2017-2022.
- 대외경제협력 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
 - EDCF. (2020). COVID-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동향. EDCF 국제개발협력 단신. May 2020.
-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
 -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2016), The State of Development Data 2016,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https://opendatawatch.com/wpcontent/uploads/2016/09/development-data-funding-2016.pdf>.
- 국제에너지 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
 - IEA. (2019).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_____. (2020). 'Global Energy Review 2020,' Flagship Report, IEA
-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
 - ILO. (2018), World Employment Social Outlook: Greening with Jobs
-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 IMF. (2020). Special Series On Fiscal Policies To Respond To COVID-19 - Greening The Recovery
- 일본 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
 - JICA. (2016). JICA Climate Change Cooperation Strategy
 - _____. (2019). JICA Climate-FIT (Mitigation) (JICA Climate Finance Impact Tool / Mitigation) Draft Ver. 3.0 September 2019
-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 OECD. (2018a).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9

- OECD. (2018b). Enhancing connectivity through transport infrastructure: the role of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and private investment. DCD Working Paper.
 - OECD. (2019). Better Criteria for Better Evaluation: Revised Evaluation Criteria Definitions and Principles for Use
 - OECD. (2020a).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COVID-19) crisis on development finance'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24 June 2020
 - OECD. (2020b). Unprecedented falls in GDP in most G20 economies in second quarter of 2020, 14 September 2020
 - OECD. (2020c). 'Building Back Better: A Sustainable, Resilient Recovery After COVID-19',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5 June 2020
 - OECD. (2020d). 'Making the Green Recovery Work for Jobs, Income and Growth',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6 October 2020
 - OEDE/DAC. (2020). DAC and OECD (2020), COVID-19 Global Pandemic: Joint Statement by the DAC and the OECD, 9 April 2020
- Partnership on Sustainable, Low Carbon Transport (SLoCaT) -
- SLoCaT (2018). 2018 Voluntary National Review : Showcasing the critical role of the transport sector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유엔 United Nations (UN) -
- UN. (2019).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 New York. U.S.A.
 - ____. (2020a).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New York. U.S.A.
 - ____. (2020b). 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olidarity: Responding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 UN Secretary General, March 2020. New York, U.S.A.
 - ____. (2020c). ECE/CECI/ICP/2020/1 Provisional Annotated Agenda for the Thirteenth Session.

-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 UNCTAD (2020). Investment Trends Monitor. October 2020.

- 세계 은행 World Bank (WB) -
 - WB. (2020). “Projected Poverty Impacts of COVID-19 (Coronavirus).” World Bank Brief, June 8, Washington, DC. U.S.A.

-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2020.12.11. 오전 9시 57분 접속)

EDCF

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아세안 중점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여건과 시사점

임소영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

물 시장에서의 ODA 자금과 기후금융의 동향 및 시사점

김자겸 평화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부 부사장

김승현 경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손진식 국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아세안 중점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여건과 시사점¹⁾

임소영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

목 차

- I. 서론
- II.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
 - 1.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의 특징
 -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
- III. 국가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 분석
 - 1.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 분석 틀
 - 2. 아세안 중점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
- IV. 결론 및 시사점
 - 1. 국별 도전과제
 -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산업연구원 자체 보고서인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과제 (2020)」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1. 서론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디지털 경제로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의 성장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가에서, 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채택과 활용 여건 등의 차이는 매우 크다. 국가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여건과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표 1〉 참조)에 따르면,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채택과 활용 여건 등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대상 176개국들 중 ICT 개발 상위 20개국과 하위 20개국은 소득 수준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표 1〉 ICT 개발지수 상위 20개국과 하위 20개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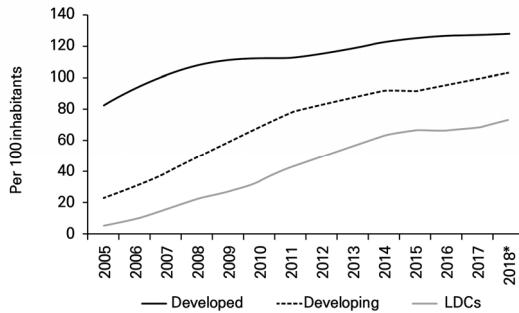
상위 20개국	하위 20개국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스위스, 덴마크, 영국, 홍콩,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일본,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미국,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모나코, 아일랜드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기니비사우,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아이티, 말라위, 기니, 탄자니아, 코모로스, 적도기니, 부르키나파소, 베냉,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솔로몬군도

출처: ITU 웹사이트를 참고한 임소영(2020) 재인용

그러나 디지털 기술 시장의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의 디지털 기술 시장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어 오히려 개도국 내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업의 전망이 밝은 편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례로 개도국 국민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전기 또는 질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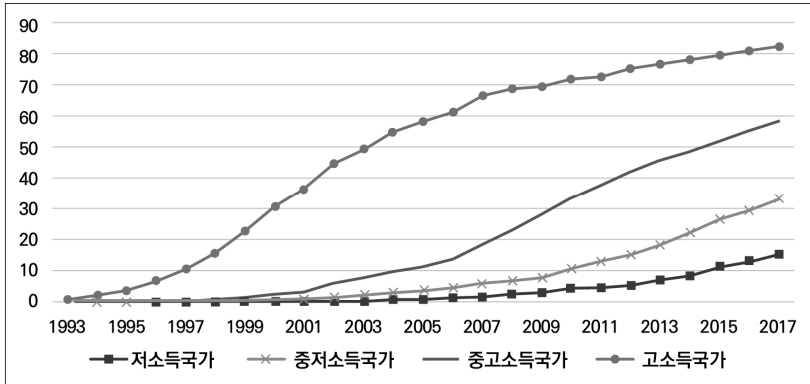
위생시설 보급률보다 높다는 점(BMZ, 2016)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이 유선전화의 사용 확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선전화와 인터넷 보급 단계에 들어서면서 기술도약(leapfrogging)²⁾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인구 100명당 모바일 휴대폰 사용자 수 추이(2005-2018년)



출처: ITU(2018)

〈그림 2〉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의)의 소득그룹별 국가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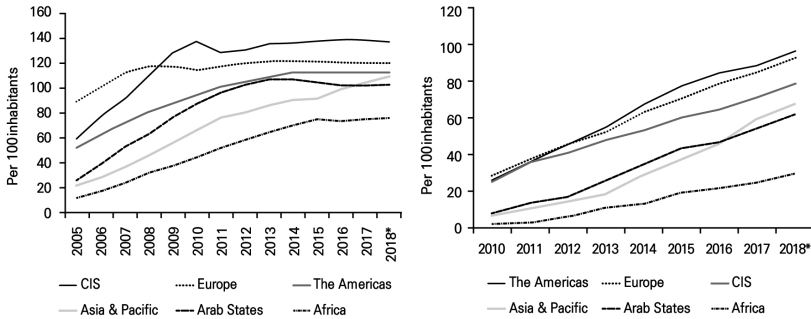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활용한 임소영(2020) 재인용

2) “앞선 국가들이 개발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거쳐 온 중간 기술 단계를 우회하여 발전하는 후발국들의 행태”(UNCTAD, 2018).

특히 개발도상국 중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환경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다른 지역 대비 낮은 경제성과를 보였던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신흥 시장과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도약, 모바일 관련 제품 사용, 인프라의 개선 등이 두드러진다. <그림 3>에서도 아태평양 지역의 모바일 제품 사용과 모바일 연결성 증가세가 두드러져 빠른 속도로 다른 지역을 앞서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지역별 인구 100명 당 모바일 휴대폰 가입자(좌)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우)



출처: ITU(2018)

개발도상국에서 실현 가능한 디지털 전환 방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글로벌 개발에 관한 이슈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개발도상국 여건에 부합하는 협력방식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개도국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세안 국가에 주목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내 역할 업그레이드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증진하려고 한다.

본고는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개발협력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디지털 전환이 개발도상국에 주는 기회와 위험요인을 살펴본 후(II장), 협력대상국의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의 여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분석 틀을 구축하여 적용함(III장)으로써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추진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우리나라의 아세안 중점협력 국가 6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에 초점을 맞추어 역내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의의를 알아보고, 앞서 개발한 디지털 개발협력 여건 분석 틀을 활용하여 이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을 국별로 도출하여 비교하였다(III장). IV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디지털 전환에 관한 아세안 중점협력국들의 국가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II.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

1.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의 특징

디지털 모바일 통신, 드론,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들은 개도국의 기술도약 기회를 열어주어 선도국들의 기술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돕는다. 기술도약은 주로 기존의 기술 패러다임

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었던 분야에서 일어나며, ICT 또는 디지털 섹터가 대표적인 분야이다. 즉, 급격한 기술진보와 비용감소로 인하여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개도국들은 지상통신선의 인프라 구축 단계 없이 모바일 통신으로 곧바로 건너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도국에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진하며 거래비용을 낮추어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디지털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개도국 내 디지털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하는 시장 형성, 시장 및 노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대두 등 디지털 경제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다(Bukht and Heeks, 2017). 실제로 디지털 경제는 신흥 시장에서 연평균 15-25%의 성장률을 보이면서(WEF, 2015) 높은 성장률을 시현 중이다. 또한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시장 확대에서 나아가, 디지털 기술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포용성을 증진한다. 케냐의 M-Pesa 모바일은행시스템과 Grass Roots Bima 보험회사, 나이지리아의 플루터웨이브(Flutterwave)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디지털 기술은 글로벌 개발에 있어 투명성과 포용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소규모 기업들의 금융 및 사업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그 결과,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증진 등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주요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강화라는 기회요인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국가, 기업, 개인의 여건과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채택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생산성 증진과 혁신 촉진에 필요한 스킬도 필요하다. 이외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하여 대규모의 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흡수역량 및 스킬 개발도 필요하다(UNCTAD, 2018). 따라서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측면에서만 디지털 전환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 제도역량 등 제반 여건의 정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디지털 전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의 배제이다. 글로벌 디지털 노동에 있어서 디지털 스킬의 부족과 기술 채택의 어려움이 있는 개도국 근로자들은 소외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수록 국가 간 또는 개인 간 경제적 여건과 역량의 차이로 인하여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즉, 경제적 여건과 역량이 있는 주체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획득 가능한 정보와 기회를 토대로 점차 더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정보 및 기회와 분리되어 이들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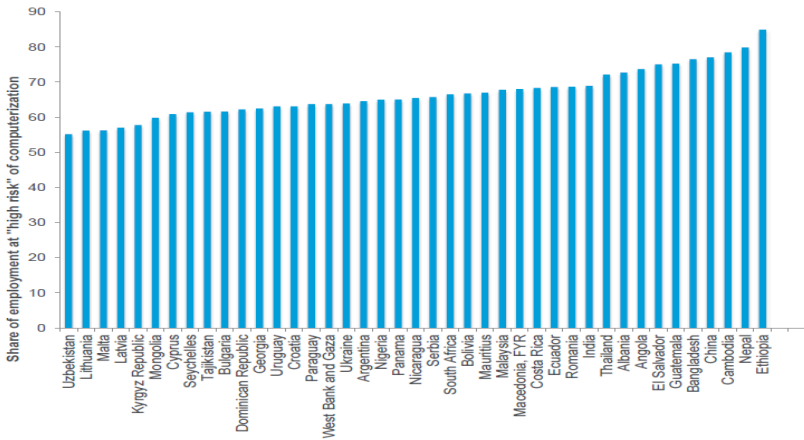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화가 실현됨으로써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업무가 사라지게 되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소비자 및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 사이버 범죄 등도 디지털 경제의 부작용이다. 개도국의 자원, 역량, 제도, 관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불리한 통합과 개도국 디지털 기업의 폐업 위험도 크다(Bukht and Heeks, 2017; Murphy and Carmody, 2015; Foster and Heeks, 2010). 인프라, 접근성, 재정적 차이에 따른 디지털 기술사용 여부 자체의 격차, 디지털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 디지털 스킬 수준의 차이 등으로 심화하는 디지털 격차는 개도국 내에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교육, 성별에 따른 소득 수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디지털 불이익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기지의 선진국 본국 회귀(reshoring)가 있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제조업 허브라는 개도국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고용과 성장을 저해한다. 선진국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offshoring)은 개도국의 저임금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개도국에서 흔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생산공정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전체 생산 비용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오히려 개도국 임금이 상승하면서 해외로 이전

하였던 선진국의 생산기지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자동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숙련 일자리가 많은 개도국은 이미 상당 부분의 일자리들이 위협받고 있다. 전체 일자리 중 평균적으로 약 57%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개도국은 55-85%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인한 위험군에 해당한다(〈그림 4〉 참조). 아직은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보다 해외 이전이 주된 형태의 생산 방식이지만(De Backer, et al., 2016), 생산기지의 회귀에 의한 개도국 일자리 감소 정도가 상당히 큰 사실이 입증되어³⁾ 자동화와 이로 인한 생산기지의 회귀가 개도국 고용 상황을 악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자동화로 인해 위협받는 개발도상국 일자리 비중(%)



출처: Frey, et al.(2016)

3) 2010-2016년 사이에 아시아 지역에 있던 1,112개 기업의 생산기지가 본국으로 회귀함으로써 138,450개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업 당 124개 일자리에 해당함. 같은 기간에 아프리카에서는 7개 기업만이 생산기지를 옮겼지만, 기업당 126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를 보임(Banga and Te Velde, 2018).

생산기지의 선진국 본국 회귀 현상에 더하여 대부분의 디지털 기업들이 선진국에 있다는 점도 디지털화로 인한 개도국의 불이익을 심화한다. 즉, 디지털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부가가치 및 고용의 대부분이 선진국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동화가 덜 진행된 개도국 입장에서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임금을 낮추려는 시도가 생기면서 개도국의 불이익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생산의 다양한 단계에 걸쳐 존재하는 디지털스레드(digital thread)에 기반한 제품 생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은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벌릴 것이다(Banga and Te Velde, 2018).

III. 국가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 분석

본 장은 국가 단위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과 이를 실행할 여건, 잠재적 영향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여건 분석 틀을 제시한다. 여건 분석 틀은 협력대상국의 디지털 전환 수요와 효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 분석 틀

전 세계의 디지털 전환 정도와 여건을 측정하는 방법론은 다양한 국제적 연합과 기구에 의해 개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디지털 경제와

연계성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활용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의 ICT개발지수(ICT Development Index, 이하 IDI)가 대표적이다. IDI는 세 가지 대분류 아래 총 14개의 세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ICT 기반 여건을 설명하는 ICT 인프라/접근성과 ICT 집중도인 ICT 사용은 각각 다섯 가지 지표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ICT 스킬은 세 가지 대리 지표들과 ICT 스킬을 보유한 인구(%)로 측정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이 개발한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이하 NRI)는 4개의 주요 범주(환경, 준비도, 활용, 영향)와 10개의 하위 범주, 53개 지표로 구성된다.

〈표 2〉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별 여건 분석 방법론 구성

ITU의 ICT개발지수(IDI)		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NRI)	
대분류	세부 분류	대분류	중분류
인프라 및 접근성	유선 광대역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별 국제 인터넷 대역폭, 컴퓨터 보유 가구(%), 인터넷 사용 가구(%),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환경	정책·제도적 환경 (9개 지표) 기업과 혁신 환경 (9개 지표)
		준비도	인프라 (4개 지표) 가격 (3개 지표) 스킬 (4개 지표)
사용	인터넷 사용자(%), 100명 당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중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통신, 유선 광대역 가입자 중 유선 광대역 인터넷 통신, 휴대폰 소유 인구(%)	활용	개인 활용 (7개 지표) 기업 활용 (6개 지표) 정부 활용 (3개 지표)
스킬	평균 취학연수, 총 중등교육 등록(%), 총 고등교육 등록(%), ICT 스킬을 보유한 인구(%)	영향	경제적 영향 (4개 지표) 사회적 영향 (4개 지표)

출처: 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Documents/statistics/ITU_IDI%20Development%20Index.pdf와 WEF(2016)를 참고한 임소영(2020) 재인용

앞서 조사한 기존 분석 도구를 참고하되,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 틀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가 도출한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전환 여건 분석 틀의 기본 방향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 추진 전략이 제시한 상위 협력방향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따르며, 따라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 또한, 본 연구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협력을 통한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전환 여건을 분석한다는 점을 고려, 파트너국의 디지털 전환 역량 및 인프라뿐만 아니라 파트너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 민간 부문의 잠재성, 그리고 디지털 관련 국제협력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하였다.

분석 틀은 크게 디지털 전환 준비도, 정책적 부합도, 민간부문 기회로 분류되는 파트너국의 여건 관련 대항목과 국제협력 현황의 대항목으로 구분된다. 이들 네 가지 대항목은 다시 세분화된 분석 지표들로 구성된다. 디지털 전환 준비도는 각국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 역량 및 스킬과 관련된 지표들로, 파트너 정부의 정책적 부합도는 ICT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부 내 ICT 사용 현황으로, 민간부문의 기회는 개인 및 기업의 디지털 사용 현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 현황은 ICT 관련 ODA 규모와 비중지표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 아세안의 국별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 분석 틀 구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준비도	인프라	전기보급률, 고정식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3G 이상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LTE/WiMAX 사용 가능한 인구
	인력 및 스킬	정보통신 분야 full-time 노동자, 활동인구의 디지털 스킬 수준
정책적 부합도	정책 및 제도	국가개발전략 또는 개발정책 내 디지털 전환 중요성, ICT 관련 법 수준, 정부 비전이 표방하는 ICT 중요도
	정부 내 ICT	공공부문 온라인서비스 수준, 온라인을 통한 일반 국민의 정책 참여도
민간부문 기회	개인 사용	인터넷 사용자, 컴퓨터 보유 가구, 휴대폰 가입자
	기업 사용	기업 간 거래에서의 ICT 활용도, 기업-소비자 간 인터넷 활용도, 기업 수준의 기술 도입 정도
국제협력 현황	공적개발 원조(ODA)	정보통신 관련 연평균 ODA 규모, 총 ODA 수혜금액 중 정보통신 관련 ODA 비중

출처: 임소영(2020)

2. 아세안 중점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 중이다. 2007년 말 지역 인구의 약 12%였던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은 2017년 말에는 약 44%(약 2억 8,640만 명)로 증가하였다(OECD, 2019).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급속한 보급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통신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정식 브로드밴드 가입자가 2009년 2%에서 2017년 5%로 늘어난 반면,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같은 시기 1.3%에서 85%로 증가한 것이다(OECD, 2019).

한편, 급속한 디지털 전환 양상과 함께 동남아시아는 여타 지역 대비, 또는 역내 국가 간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 격차를 보여준다. 2017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54.5%의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OECD 국가 평균 86.2%, 중저소득국 평균 42%의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통계를 비추어 볼 때(OECD, 2019), 동남아 국가들은 선진국 대비 낮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이지만 중저소득국 평균보다는 디지털 서비스 활용도가 높다. 동남아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이용도는 국별로 차이가 있다.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을 고(高) 활용 국가, 부분 활용 국가, 저(低) 활용 국가로 분류한 결과, 디지털 서비스의 보급 정도는 경제발전 수준과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2019)(〈표 4〉 참조).

〈표 4〉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기준 아세안 국가 분류

분류	국가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2017)	일인당 GNI(달러) (2018)	소득 구분 (세계은행 기준)
고(高) 활용 국가 (80% 이상)	브루나이	95	31,020	고소득
	싱가포르	85	58,770	고소득
	말레이시아	80	10,460	중고소득
부분 활용 국가 (35-80%)	필리핀	60	3,830	중저소득
	태국	53	6,610	중고소득
	베트남	50	2,400	중저소득
저(低) 활용 국가 (35% 미만)	캄보디아	34	1,380	중저소득
	인도네시아	32	3,840	중저소득
	미얀마	31	1,310	중저소득
	라오스	26	2,460	중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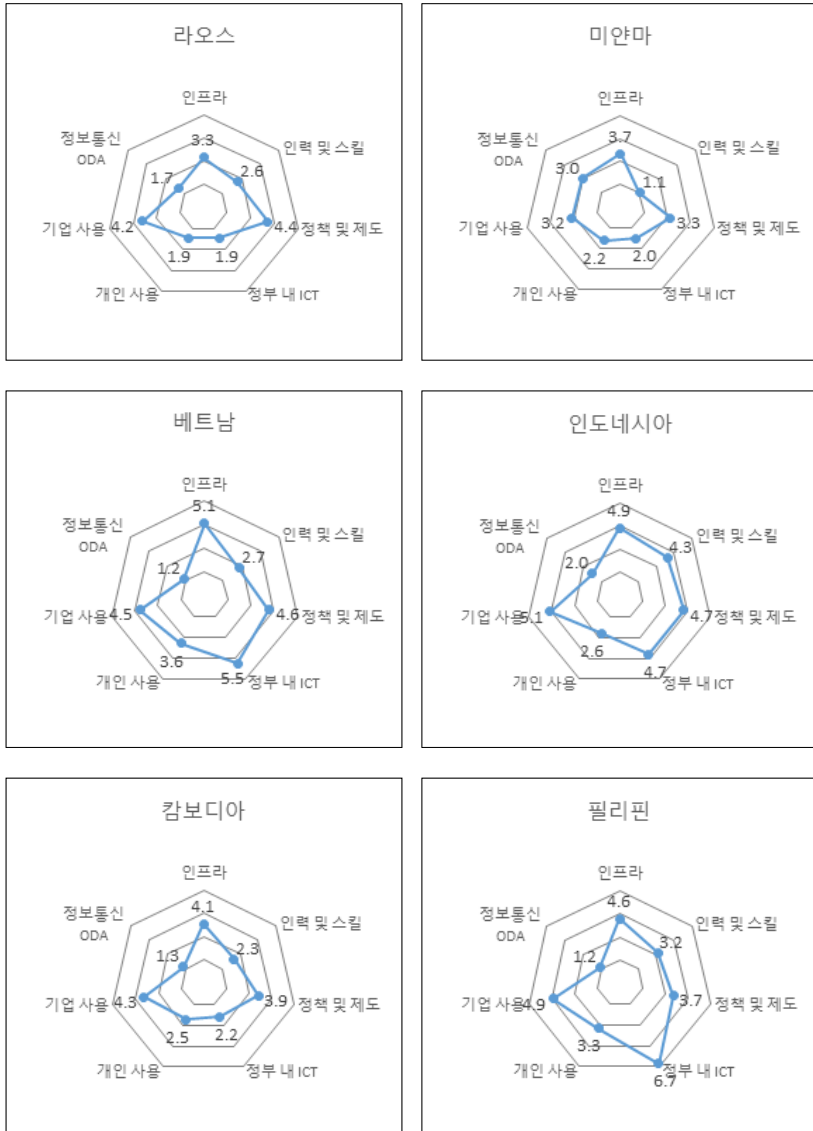
출처: OECD(2019)를 참고한 임소영(2020) 재인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으로 대표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각각 다른 경제개발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고위급 차원에서도 역내 연결성 제고 방안으로 디지털 혁신을 중시하고 있다. 이들은 2010년 제17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연계성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이하 MPAC) 2010을 채택하면서 디지털 연계를 포함하는 연계성 증진과 이에 따른 역내 통합에 관하여 고위급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이후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포함하는 MPAC 2025를 2016년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채택하였다. MPAC 2025를 통해 디지털 분야를 주요 전략적 추진 분야로 설정하여 역내 연계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중시한다는 아세안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앞 절에서 도출한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 분석 틀을 토대로 아세안 10개국 중 한국의 중점협력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6개국의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 중 국가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정부 내 ICT 활용, 인력 및 스킬, 인프라이다. 또한, 아세안 지역의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비하면 정보통신 관련 ODA의 절대 규모와 상대적 비중 모두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그림 5〉 참조),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서로 유사한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을 보인다. 이들은 특히 정부 내 ICT 활용 정도가 매우 낮으며, 개인의 ICT 활용도 높지 않은 편이다. 미얀마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열악한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을 보여주며, 특히 디지털 관련 인력 및 스킬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통신 분야 ODA를 비중 있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동 분야의 국제협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좀 더 나은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을 보이면서 또 다른 유사성을 지닌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 부문 서비스와 기업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ICT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업에 비하여 개인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림 5〉 아세안 6개국의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 프로파일



출처: 임소영(2020)

IV. 결론 및 시사점

1. 국별 도전과제

국가별로 서로 다른 디지털 전환 환경을 보이므로 공여국은 파트너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별로 특히 열악한 지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본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아세안 6개국의 정량적 국별 현황을 바탕으로 각국의 디지털 전환 여건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디지털 전환시 당면하게 되는 도전과제와 고려사항들을 국별로 도출하였다.

라오스는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 품질 및 가격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며, 아세안 6개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브로드밴드 가격으로 귀결된다. 양질의 저렴한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라오스 디지털 전환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법·제도적 개선에 집중하되, 민관협력체제(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얀마는 2011년 개혁개방 이후 세계에서 손꼽히는 디지털 전환

속도를 경험하고 있으며, 기술도약이 명백하게 실현되고 있는 국가이다. ODA를 통한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협력이 미진한 다른 인접 국가들과 비교하여 미얀마는 정보통신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해외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미얀마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은 상당 수준 높아졌으나, 관련 인적자본과 스킬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미얀마는 개방과 급속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민주화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되었다.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보장하는 정책과 규제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베트남은 아세안 6개국 중에서 인프라와 기업 및 개인의 사용, 정부 내 디지털 기술 활용 측면 등 여러 방면으로 고른 디지털 발달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베트남 현지 디지털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베트남 정부도 자국의 디지털 기업들을 지원하여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해외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도 공여기관으로부터는 기술을 이전받고, 베트남 자체 기업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 요소를 구성하려는 요구가 강하다. 한편,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강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인도네시아는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에 힘입어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경제권으로 디지털 경제의 잠재성이 크다. 기업의 높은 디지털 사용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수준 높은 디지털 인력 및 스킬 등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니콘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사업에 우호적인 정부, 국내 소비 증가, 국민들의 높은 디지털 기술 수용도, 활발한 해외투자 등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 다만, 도시와 그 외의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크며, 개인의 디지털 사용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또한, 혁신적인 디지털 유니콘 회사 및 스타트업들과 기존 사업모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간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관련 인프라의 강화 및 유지·관리와 기존 기업들과의 갈등 해결이 요구된다.

캄보디아는 매우 현실적인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모바일 접근성을 급속히 제고할 수 있었다. 교육받은 젊은 계층과 중산층의 증가로 디지털 상품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 결제, 온라인 게임, 전자 상거래 등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여 디지털 시장의 잠재성이 크다. 이와 같은 디지털 시장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디지털 관련 인프라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며 정부와 기업 활동에 대한 적용도 미진한 수준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디지털 인력 및 스킬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사업을 캄보디아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을 실현해 오고 있었다. 특히 젊고 역동적인 인구(중간 연령 22세)는 영어가 가능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더욱 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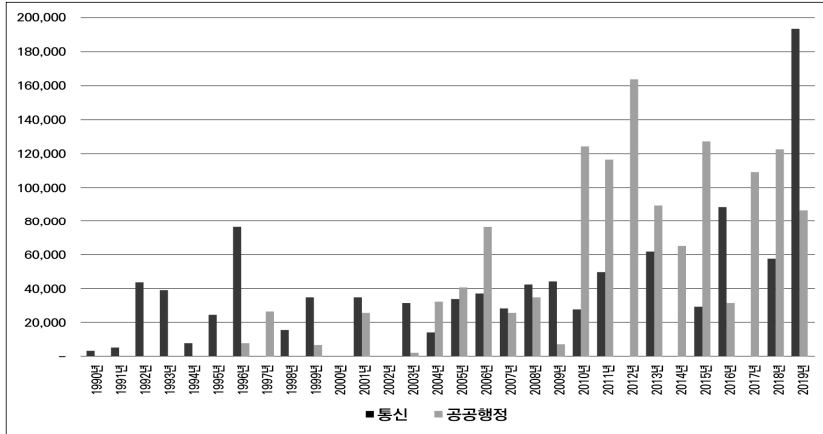
전환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는 필리핀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개인 정보 유출, 해킹과 같은 사이버 범죄에의 노출 위험이 높아 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대도시와 농촌·격지 사이의 디지털 격차가 매우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가격이 아세안에서 가장 높은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과 법·규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은 주로 통신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디지털전환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공공행정 분야 사업은 대부분 전자정부 사업이므로 본 연구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 포함하여 실적을 검토하였다. 통신 분야는 비교적 EDCF 초기였던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상당한 비중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비중 측면에서 매우 변동이 심한 추세를 보였다. 1987년부터 총 누계 1조 35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5.1%에 해당한다. 공공행정 분야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EDCF 전체의 약 10% 내외에 해당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EDCF는 공공행정 분야에 1987년부터 총누계 1조 3,279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전체 누적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실적이다(〈그림 6〉, 〈그림 7〉 참조).

〈그림 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
(통신, 공공행정) 지원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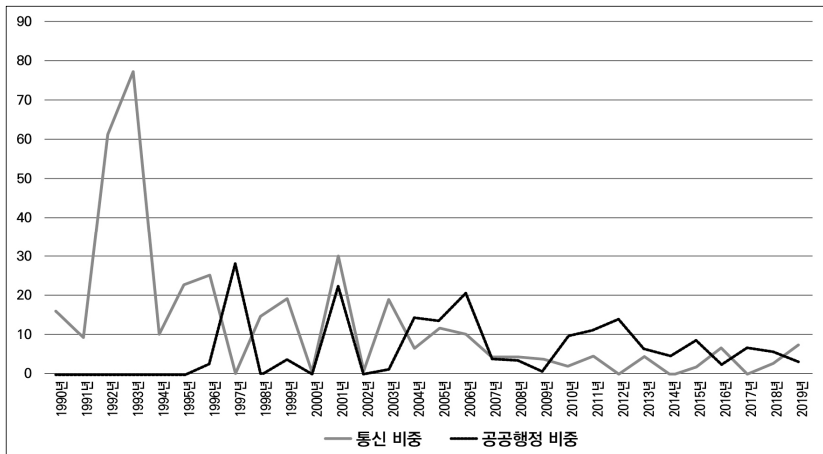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승인액 기준



출처: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2001> (검색일: 2020.11.15.)

〈그림 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
(통신, 공공행정) 지원 비중 추이

단위: %



출처: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2001> (검색일: 2020.11.15.)

EDCF의 효과적인 아세안 지역 내 디지털전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제언한다.

우선, 디지털 전환 EDCF 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의 통계 시스템에서는 디지털전환 사업 요소를 분야 단위로 가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ICT 기술이나 디지털 요소는 통신과 공공행정 등 정해진 분야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범분야(cross-cutting)적 성격을 지닌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EDCF 사업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고안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비교우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아세안 역내 연결성 증진을 고려한 디지털 통합이 필요하다.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전환은 국가별 접근뿐만 아니라 역내 연결성을 고려한 사업의 구상이 필요하다. 아세안은 2010년 MPAC을 채택하면서 동남아시아 역내 연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2016년 채택된 MPAC 2025를 통해 아세안 역내 연결성 중 특히 디지털 연계와 통합을 전략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는 지역 수준에서 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 역내 디지털 연결성 증진을 위해 아세안 국가 간 통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아세안 역내 디지털 연결성 증진을 위해서는 아세안 내 열악한 물류 서비스 및 인프라와 그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물류 네트워크, 아세안 국가들 간의 수많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국가 간 교역의 복잡성, 편리하고 값싼 디지털 결제 수단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내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수립, 교육 훈련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역내 물류 인프라와 시스템 개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획, 추진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확진자의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려면, 교통, 유통, 의료 등 다부문에 걸친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비대면 활동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인프라의 보편적인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구축된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의 경쟁력을 활용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공급망의 다변화 차원에서 특히 공급원의 탈중국과 글로벌 공급망의 신남방 지역으로의 확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행을 위해서는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 시장의

디지털 전환 여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진 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의 방식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20년 한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의 발발로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개발협력 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겼다. 팬데믹을 일회성 현상이 아닌 뉴노멀 시대에 주요 글로벌 환경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비하여 ODA 사업의 현지화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과의 협력 강화, 현지 컨설턴트의 활용 확대 등을 통해 현지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때, 수출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재와 장비 등을 중심으로 현지 조달을 확대하고 현지 고용 증대를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본부와 현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발협력 행정의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 시행할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임소영 (2020).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과제, 산업연구원.

해외문헌

Banga, K. and Te Velde, D. W. (2018). Digitalisation and the Future of Manufacturing in Africa,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London.

BMZ (2016). Toolkit – Digitaliz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Bukht, R. and Heeks, R. (2017). Defining,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Working Paper 68, Center for Development Informatics, Manchester.

De Backer, K., Menon, C., Desnoyers-James, I., and Moussiégt, L. (2016). Reshoring: Myth or Realit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27, OECD, Paris.

Foster, C. and Heeks, R. (2010). Researching ICT micro-enterpris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lectron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43(7), pp. 1-20.

Frey, C. B., *et al.* (2016). Technology at Work v2.0 – 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Citi Group.

ITU (2018).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8, Geneva.

Murphy, J.T. and Carmody, P. (2015). Africa's Information Revolution, John Wiley, Chichester.

OECD (2019). Southeast Asia Going Digital – Connecting SMEs, OECD, Paris.

UNCTAD (2018). Technology and Innovation Report 2018, UN.

온라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2001>) (검색일: 2020.11.15.)

물 시장에서의 ODA 자금과 기후금융의 동향 및 시사점¹⁾

김자겸

평화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부 부사장

김승현

경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손진식

국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II. 개발금융과 기후금융의 분류 방식

1. 자료의 취득원
2. 자료 분류 체계

III. 물인프라 개발금융과 기후금융 현황

1. ODA 자금의 역할
2. 물분야 기후금융 동향
3. 개발금융과 기후금융과의 관계
4. 각 기관별 기후금융 현황 자료
5. 국가별 기후 관련 ODA 지원 현황
6. 기후금융사업의 특성 및 접근 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2020년 6월 대한상하수도학회에 발표된 「글로벌 물시장에서의 기후 금융과 ODA자금 동향 조사」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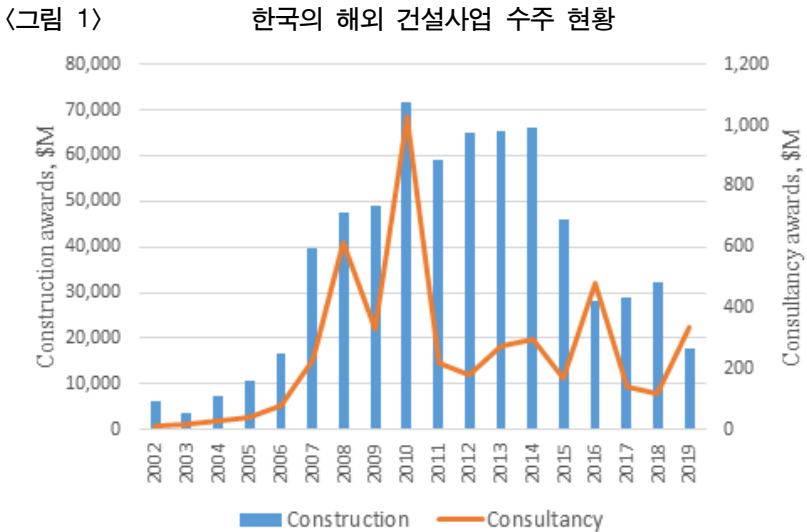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이나, 최근 기후변화, 인구증가, 산업화에 따른 물 수요 증대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 중 21억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WHO/UNICEF, 2017), 전체 자연재해의 90%가 물과 관련되어 있다(UNISDR). 이에 따라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SDGs) 중 하나로 ‘물과 위생’이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물 행동 10년(International Decade for Action on 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8-2028)’이 발족되는 등 물 관련 이슈는 국제적인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물 산업은 전통적인 개발금융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와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먼저 ODA란 공적주체가 수원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자금, 기술협력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ODA를 시작하였다. ODA의 지원분야는 경제 및 사회 인프라·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물 산업은 특유의 공공성과 비탄력성으로 민간이 진출하기에는 제한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ODA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 다음으로, 기후금융의 경우 아직 명확하게

2) Winpenny 외, 2009; OECD, 2010

수립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적기관,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혹은 적응(Adaptation)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UNFCCC). 이 중 물 분야는 일반적으로 기후금융 중 적응 부분과 관련성이 높다.

한편, 최근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 인프라 사업 감소와 함께 해외 건설사업 및 설계용역 수주도 <그림 1>과 같이 감소추세이다. 또한 엔지니어링 경쟁력 저하³⁾도 문제시되고 있다.



출처: 해외건설협회 수주통계 자료.

3) KENCA, 2019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앞서 언급한 물 분야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물 분야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향후 투자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물 산업을 대상으로 전통적 개발금융인 ODA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후금융의 동향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개발금융과 기후금융의 분류 방식

1. 자료의 취득원

본고에서 사용되는 ODA 자료는 주로 OECD DAC에서 취득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이하 WBG),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WASHfunders.org에서 취득하였다. 기후금융 자료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Climate Policy Initiatives(CPI), 7개 다자개발은행(WBG, ADB, African Development Bank(Af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European Investment Bank(EIB),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Islamic Development Bank(IsDB), 이하 7MDBs)에서 발행한 자료⁴⁾에서 취득하였다. 국내 ODA 현황은 한국수출입은행 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행한 자료에서 취득하였다.

4) 7MDBs Joint Report, 2011~2019

금액 단위는 미 달러이며, 2016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2017년과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용어에 대한 표기는 우리말이 있는 경우에는 원문을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하지만 우리말로 해석이 곤란하거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다.

2. 자료 분류 체계

정확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자금집행에 대한 분류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회계상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른 자금이나 집행기관간 적절한 비교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다. 대부분의 ODA 기관에서는 공통된 분류기준을 사용하지만, 일부 기관은 자체 목적 혹은 접근 방법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른 기준을 통해서 나온 숫자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숫자에 대한 산출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물분야에 투입되는 기후금융은 정형화된 분류체계를 가진 ODA와는 달리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⁵⁾ 비교의 정확성을 위하여 가급적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였다.

물 사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자료를 발행하는 기관과 발행 목적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⁶⁾ OECD DAC의 경우 “water and

5) Stadelmann 외, 2012; Steele, 2015

sanitation and other water-related sectors”로 나타내며, <표 1>과 같이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표 1> OECD DAC의 물 분야 사업 코드

Sub-sector	Code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large systems	14120
Water supply - large systems	14021
Sanitation - large systems	14022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14030
Basic drinking water supply	14031
Basic drinking water supply(14031); Basic sanitation	14032
Education and training i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14081
Water sector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14010
Water resources conservation (including data collection)	14015
River basins development	14040
Waste management/disposal	14050
Water transport	21040
Hydro-electric power plants	23220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31140

출처: OECD DAC.

6) 7MDBs, 2011~2019; World Bank, 2016

7) OECD DAC, 2013

세계은행도 ‘water supply and sanitation, waste management’로 표기하고 있으며, 하위 항목⁸⁾은 총 11개로 OECD DAC의 하위항목 중 ‘Water supply and sanitation’의 구성과 유사하다.

하지만 기후금융에서는 다른 분류체계를 가진다. MDB에서는 ‘Water and Wastewater Systems’, CPI에서는 ‘Water and Wastewater management’로 표기된다.⁹⁾ 기후금융 중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물 산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복원력 있는 인프라(climate-resilience infrastructure) 구축이 중심을 이룬다. 기후완화 분야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등 물 분야와 관련된 부분이 적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응 부문에 투입된 자금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통칭은 ‘Water and Wastewater Systems’으로 한다. 하위 항목으로는 Water supply, Wastewater infrastructure/management, Water resource management로 이루어져 있다¹⁰⁾. Agricultural irrigation이나 River flood protection measures에서도 물 분야를 다루기는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고 해당 하위 섹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로 물 분야 금액에서는 배제하였다. 기후금융에서 다른 물분야의 개념과 범위는 OECD DAC나 WBG의 WSS와 비슷한 정도로 간주한다.

8) water resources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14010); water resources protection(14015);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large systems;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14020, 14021, 14022, 14030, 14031, 14032), river development(14040), waste management/disposal(14050), education and training in water supply and sanitation(14081)

9) Micale 외, 2018

10) 7MDBs, 2011-2018

III. 물 인프라 개발금융과 기후금융 현황

1. ODA 자금의 역할

ODA는 개발금융의 일종으로, 개도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금원이다. 2007~2015년 물 분야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은 158억불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약 7.78%를 차지하며¹¹⁾, MDB의 개도국 인프라 건설 지원금액에서 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17%에 해당한다.¹²⁾ 자금의 성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물분야에서 개발금융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에 해당하며¹³⁾, 나머지는 개도국 정부 자금이 84%, 민간자금을 포함한 기타 자금이 10%를 차지한다.

특히, 개발금융 중 ODA 자금은 개도국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인 기초 조사, 기술지원, 계획수립, 역량개발 및 타당성조사에 활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첫 단계로써, 민간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¹⁴⁾. 더군다나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업의 매출과 손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¹⁵⁾.

11) Oxford Economics, 2017

12) Miyamoto,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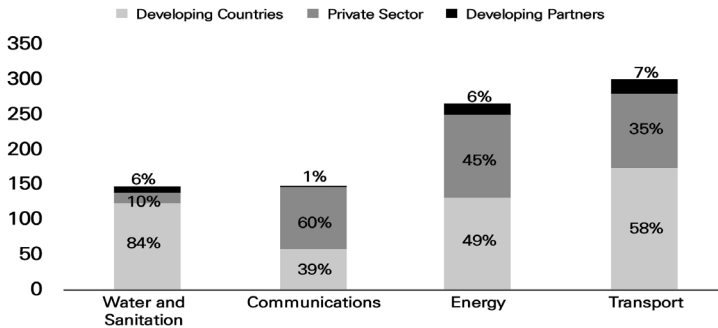
13) Coppard 외, 2012; Miyamoto, 2016

14) OECD, 2010

15) 건설산업연구원, 2018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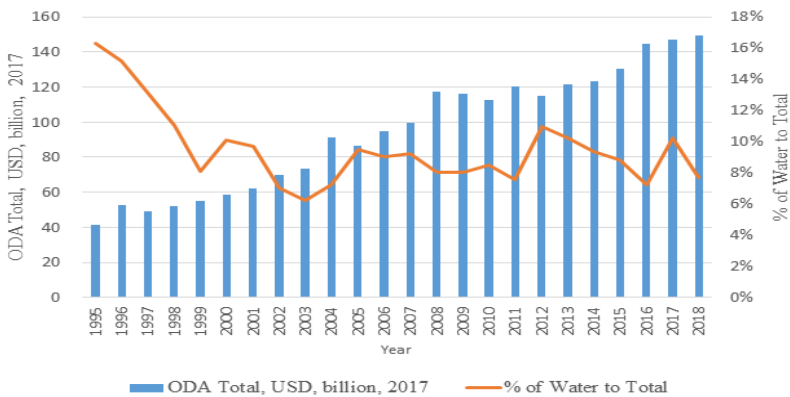
개도국의 인프라 분야별 투자재원



출처: Miyamoto et al. (2016)

우리기업의 해외 물 분야 진출규모는 〈그림 1〉의 전체 해외건설 수주 금액 추이와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ODA 약정 금액(commitments)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와 같이 전체 ODA 약정금액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물분야 비중은 1995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평균 8~10%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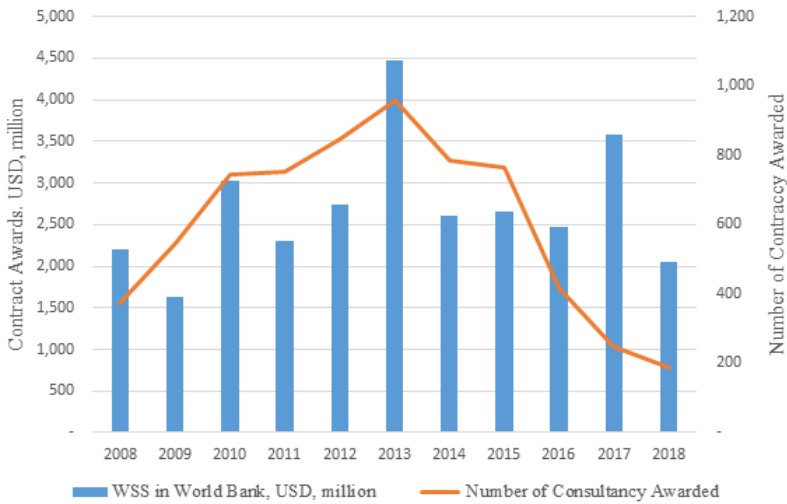
〈그림 3〉 전체 ODA 약정금액과 물분야 비중(1995~2018년)



출처: OECD DAC.

대표적 발주기관인 WBG의 물 관련 사업 발주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4>에서와 같이 2013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물 분야 사업 중에서도 컨설팅 사업 건수는 2013년 959건에서 2017년 247건으로 1/4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그림 4> 세계은행 그룹(WBG)의 물 분야 계약 현황



출처: 세계은행 조달 데이터.

2. 물 분야 기후금융 동향

기후금융은 크게 완화와 적응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목적의 완화와는 달리, 적응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대비, 대응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용도는 경제적으로 볼 때, 개도국에서는

인프라 개발에 해당된다. 또한 적응 부문은 실질적인 구조물과 정책으로 구현되어 ODA의 목적 및 실현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ODA와는 달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기후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존재하지 않고, 절반 이상이 민간자금으로 구성되어, 자금에 대한 투입 및 용도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자금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분야에서 기후금융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WBG는 ‘New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Resilience’를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억불, 총 500억불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하였고 (World Bank, 2019), Green Climate Fund(GCF)도 앞으로 완화와 적응 비율을 50:50으로 가져간다고 선언한 상태이다(GCF, 2018). ADB나 AfDB도 기후 적응 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ADB, 2015; AfDB, 2015). 그리고 한국정부도 정책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DA 기반 강화’를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으로서, 1) SDGs 목표와 리우 마커를 활용한 ODA 사업현황 분석, 2) 주요 목표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포함, 3) ODA 평가시 기후변화 지표 설정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16) Oliver 외, 2018

3. 개발금융과 기후금융과의 관계

개발금융이 정부나 기관이 공공이나 민간 투자를 통하여 구체적인 산업과 사업 개발에 투자하는 노력을 말한다고 할 때, 기후금융은 인간의 개발에 의해 망가진 기후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노력 혹은 변화된 기후에 의하여 피해를 받거나 예상되는 취약성에 대응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UNFCCC는 기후금융이 ‘새롭고 추가적인 것(new and additional)’이어야 한다고 규정(Article 4.3)하며,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역사적으로 온실 가스를 배출한 선진국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서술했다¹⁷⁾. 이에 비하여 개발금융은 글로벌 연대에 의한 것으로, 개도국의 빈곤 구제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원조로 평가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은 대부분 적도 및 아열대 부근에 위치하는 개도국으로, 이들은 ODA를 받아왔던 국가들이며 ODA나 기후 금융이 투입되는 분야도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ODA에 해당되고 어떤 부분이 기후금융에 해당되는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공여국에 해당되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같은 목적에 투입되는 자금을 굳이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봐야 하는지 현대 국가의 회계 및 예산 결정 시스템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여국이나 기관은 개도국에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ODA에 포함시켜서 처리한다.

17) Khan, 2015

이 부분은 수원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즉 개발의 목적물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목적물이 다른 경우에는 제한된 원조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여국의 ODA 지출규모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후금융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기후와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ODA 지출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문별로 과거와 같은 수준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공여기관이 요구하는 기후 변화 프레임에 따라서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을 새로이 습득해야 한다.

4. 각 기관별 기후금융 현황 자료

기후정책 이니셔티브(Climature Policy Initiative, CPI)에 따르면 2017-2018년 평균 기후금융 규모는 5,740억불로 추정되며, 이 중 완화부문은 5,320억불(비중 93%), 적응부문은 300억불(5%)에 해당한다. 지원주체 별로는 민간부문이 전체의 48%인 2,740억불이고, 공공부문은 52%인 3,000억불이다. 물 분야는 주로 '적응' 부문에 집행되었고, 전체 적응부문 지출의 1/3에 해당하는 100억불이 물 분야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¹⁸⁾.

OECD DAC에서도 리우마커 등을 활용하여 기후 관련 개발금융 규모를 측정하고 있으며, 2018년 승인액 기준 동 규모는 730억불이다. 이는 2013년 416억불 대비 75% 증가한 금액이다¹⁹⁾. 전체 ODA가 동일 기간에 23%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기후 관련 개발금융이 얼마나 크게 확대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부문별로는 기후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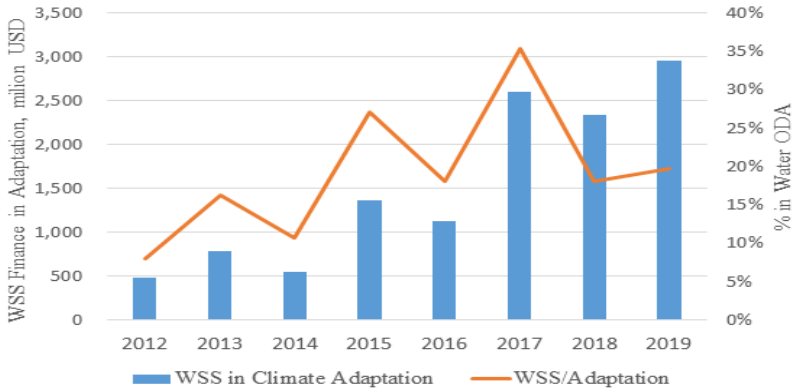
18) Updated View on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9

19) OECD DAC, 2020

28%, 기후완화 56%, 적응 및 완화 모두 관련된 건은 16%에 해당한다. 물 분야는 전체 기후금융의 11.6%(적응 17.3%, 완화 7.2%)를 차지한다.

7개 MDB는 기후금융으로 2015/2016년 평균 262억불을 지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적응’ 부문과 관련된 금액은 56억불이며, 그 중에서 물분야에는 12억불로 전체 적응부문 지출에서 21%를 차지하였다. 추세적으로 살펴봤을 때, 7MDBs의 기후금융 중 적응자금 규모는 2012년 59.6억불에서 2018년 73.5억불까지 약 23%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응부문에서 물분야 관련 지원은 적응 자금 전체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2012년에는 4.8억불이었지만, 2019년에는 29.5억불로 약 6배 확대되었으며, 전체 적응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8%에서 2019년 20%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 7개 다자간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적응부문 및 물 분야 지원금액



출처: 7MDBs Joint Report.

WBG의 2019년 ‘Climate Adaptation Initiative’, GCF의 정책 및 ADB와 AfDB의 적응부문 집중 투자전략, 2016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The twenty-secon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22)) 로드맵 등 선진국들은 적응 부문에 대한 자금을 2020년 1,000억불 조성하기로 약속하였다²⁰⁾. 따라서 현재 증가하는 기후변화 적응자금의 추세와 주요 기관의 정책방향으로 볼 때 앞으로 물 분야에서 기후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로 높아져 현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5. 국가별 기후 관련 ODA 지원 현황

Donor Tracker에 따르면, 2018년 승인액 기준 OECD DAC 회원국들의 기후 관련 양자 ODA 규모는 총 332억불로, 2014년 242억불 대비 37%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96억불, 독일 80억불, EU 56억불, 영국 20억불 순이다. 양자 ODA에서 기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 53%, 슬로베니아 45%, 독일 42%, 스웨덴 40% 순으로 나타났다²¹⁾. 지원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는 유상지원 비중이 높으나, EU, 영국, 스웨덴 등은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²²⁾. 한편, 한국의 기후자금 규모는 양자 ODA의 6.4%인 1.8억불로,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 및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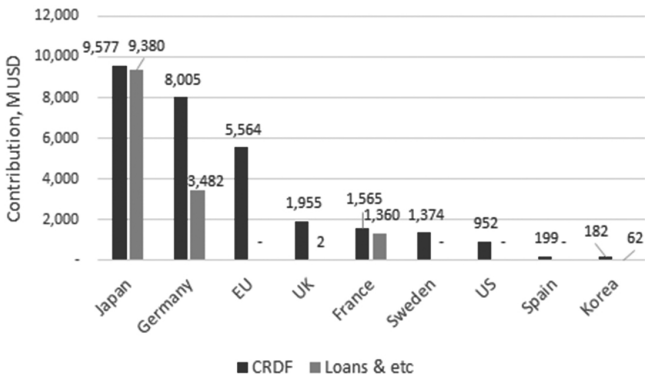
20) UNFCCC, 2016; Climate Funds Update, 2019

21) Donor Tracker (2020) <https://donortracker.org/>

22) OECD DAC Climate-related development finance Data (2020)

23) 2018년도 전체 24억불중 기후자금은 7.5%인 1.8억불에 불과하며, 그 중 유상지원은 34%인 62백만불임.

〈그림 6〉 2018년 주요 공여국별 기후 관련 양자 ODA 지원 현황



출처: OECD DAC²⁴⁾.

6. 기후금융사업의 특성 및 접근 방안

각 국가 및 기관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물 분야 ODA에서 기후관련 금융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ODA 사업과 기후금융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기후금융은 집행하는 주체가 다양하다. ODA는 정부, MDB, 양자간 원조기관 등이 주요 공여주체였지만, 기후금융을 제공하는 주체는 전통적인 개발금융 공여 기관에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등 각종 다양한 목적을 가진 기후금융 기관이 추가된다. 그 중 적응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UNFCCC의 Adaptation Fund(AP), Special Change Fund (SCCF) 등이 있으며, non-UNFCCC 중에서는 물 분야와 관련하여

24) CRDF: Climate-related development finance, Loan & etc: it may include an equity.

Pilot Program Climate Resilience(PPCR) 등이 있다. 각 기관마다 지원 목적, 중점지원 분야, 지원대상국,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제안하려는 사업의 성격, 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후금융 사업은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민간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송도에 위치한 GCF의 경우 인증기관(Accredited Entity)만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2019년 10월 기준 88개로, 금융기관 혹은 개도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유일하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각 자금이 설정한 인증기구를 통해 사업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금융 사업은 최초 시작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업 제안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Climate vulnerability assessment, CVA)와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RA)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노력이 사업타당성 검토와 설계까지 연결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전에 실시한 평가가 정확히 시행되었는지, 기후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한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IV. 결론

이상으로 볼 때, 향후 확대될 기후변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후 금융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분야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분야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제안은 민간기업 스스로 할 수 없는 만큼,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제안 내용에 대한 공감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사업에 필수 요소인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도 평가는 과거 개발금융과는 성격과 용어 측면에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수행 능력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행 능력과 경험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수행에서 키워지는 것들이다.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경쟁력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많은 기후관련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사업에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기후변화 적응사업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제협력개발위원회,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김민형 (2018),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ODA 자금 활용성 제고 방안, 건설산업연구원

코이카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해외문헌

7MDBs, (2011~2019). Joint report 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limate finance, WBG, ADB, AfFB, IDB, EIB, EBRD, IsDB (7MDBs).

Climate Finance Thematic Briefing: Adaptation Finance, Climate Funds Update (2019). www.climatefundsupdate.org (November 21, 2019).

Gurara D., Klyuev V., Mwase N., Presbitero A., Xu X., and Bannister G., (2017). Trends and challenges in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low income countries, IMF Working Paper.

Joyce, J., Granit, J., Frot, E., Hall, D., Haarmeyer, and D., Lindstrom, A., (2010).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Financial Flows to the Wat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Report 28, SIWI.

Khan, M., (2015). Polluter-Pays-Principle: The Cardinal Instrument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https://www.mdpi.com/2075-471X/4/3/638/pdf>.

Micale, V., Tonkonogy, B., and Mazza, F., (2018). Understanding and Increasing Finance for Climate Adap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limate Policy Initiative (CPI).

Miyamoto, K. and Chiofalo, E., (2016).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for Infrastructure: With a Special Focus 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30, OECD Publishing, Paris.

OECD DAC, (2013).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Guidance for the use of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urpose Codes, OECD DAC.

- OECD, (2016).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Chapters 1–6.” CD/DAC(2016)3/FINAL. OECD, Paris.
- OECD, (2017). Financing water and sani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key trends and figures,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Financing%20water%20and%20sanitation%20in%20developing%20countries%20-%20key%20trends%20and%20figures.pdf>)
- Oxford Economics, (2017).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to 2040, GI Hub, London.
- Rob Macquarie, Baysa Naran, Paul Rosane, Matthew Solomon, Cooper Wetherbee, (2020), Updated View of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9, Climate policy Initiative (CPI).
- Stadelmann, M. J., Roberts, T. J., and Huq, S., (2012). Baseline for trust: defining ‘new and additional’ climate fundin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IIED), <http://pubs.iied.org/17080IIED.html>
- Steele, P., (2015). Development finance and climate financ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IIED), ISBN 978-1-78431-169-8.
- Winpenny, J., Bullock, A., Granit, J., and Löfgren, R., (2009).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nd the water sector,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SIWI).
- World Bank, (2016). Aid Flows to the Water Sector, World Bank, Washington, DC.

온라인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https://www.etis.or.kr>) (검색일: 2019. 12. 10)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계약 수주통계 (http://www.icak.or.kr/sta/sta_1401.php) (검색일: 2019. 12. 4)
- ADB (<https://www.adb.org/news/>) (검색일 2019. 11. 20)
- AfDB (<https://www.afdb.org/en/news-and-events/>) (검색일: 2019. 12. 14)

EDCF (<https://www.edcfkorea.go.kr/>) (검색일: 2020. 6. 6)
GCF (<https://www.greenclimate.fund/>) (검색일: 2019. 11. 23)
OECD DAC CRS Data, (2017). Online database with the topic of “Aid to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water-relatedaid.htm>) (검색일: 2019. 11. 8)
OECD DAC Climate-related development finance data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climate-change.htm>) (검색일: 2020. 5. 2)
Wikipedia,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https://en.wikipedia.org/wiki/Development_finance_institution) (검색일: 2019. 12. 5)
World Bank, PRIOR REVIEW CONTRACT AWARDS UNDER BANK-FINANCED (IDA/IBRD) INVESTMENT PROJECTS, (<https://projects.worldbank.org/en/projects-operations/products-and-services/brief/summary-and-detailed-borrower-procurement-reports>) (검색일: 2019. 12. 4)

EDCF

III.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안영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주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안영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목 차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2. 사회동향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1. 국가개황

1. 일반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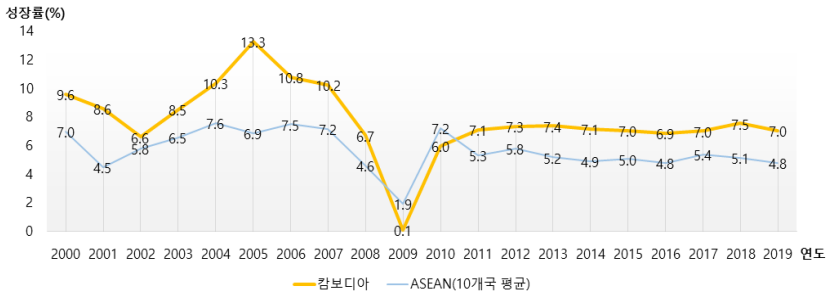
면적	181천 km ²	GDP	263.2억 달러(2020 ^f)
인구	16.74백만 명(2020 ^f)	1인당 GDP	1,571.90 달러(2020 ^f)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Riel
대외정책	친중국 외교	환율(달러당)	4,061.15(2019)

-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1953년 11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입헌군주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중임.
- 봉제산업, 건설업 및 관광업 호조로 20년 간 7%대의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서 외채상환지표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임.
- 2018년 7월 총선에서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하원 125석 전(全)석을 차지하며 집권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총선을 전후한 야당 강제 해산 및 언론사 탄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비판적인 EU·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됨.
- 태국만 연안에서 발견된 해상 유전에서 2020년 말부터 원유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봉제산업, 건설업 및 관광업 호조로 20년 간 평균 7%대의 고도 경제성장세 지속

○ 캄보디아는 전통산업인 농업 외에 봉제품 수출, 관광업 성장 등에 힘입어 최근 20년 간 연평균 7.7%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 아세안(ASEAN)¹⁾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5.6%)을 상회하는 수치로, 최근에는 부동산·인프라 건설 활성화, 구매력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도 성장동력으로 작용함. 2019년에도 3대 성장동력²⁾인 봉제산업, 건설업 및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7%대 성장률을 이어갔음.

〈그림 1〉 캄보디아 및 ASEAN 회원국의 경제성장 추이(2000~2019년)



출처: IMF

-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년 설립된 역내 기구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창설국),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 등 총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사회·문화 발전 및 안전 보장 등을 목표로 함.
- 2) World Bank, "Cambodia in the time of COVID-19", May 2020. 봉제산업·건설업·관광업의 2019년 GDP 성장 기여도는 71.4%(각 17.0%, 35.7%, 18.7%)에 달하며 전체 노동자 대비 고용비율은 20.1%(각 10.7%, 2.3%, 7.1%)로 집계됨.

- (봉제산업) 의류, 신발 등 봉제산업은 캄보디아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대표산업으로,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EU, 미국 등 선진국의 무역특혜제도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음. ADB³⁾에 따르면, 1997~2015년 기간 중 캄보디아 수출의 약 90%가 봉제품에 집중되었으며, 자전거, 전기기기 등 수출 품목의 소폭 다변화를 이룬 2019년에도 봉제품 수출 비중이 74.3%에 달함(캄보디아 중앙은행).

- 수출시장별로는 관세 혜택 활용이 가능한 EU(31.4%) 및 미국(27.4%)에 약 60%가 집중되어 있음. 한편, 2016년부터 미국이 배낭, 핸드백 등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면서 여행용품이 봉제산업의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 중임(2016년 수출액 1.5억 달러 → 2019년 11억 달러, ITC Trade Map).

- (건설업)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가속화, 외국인의 집합건물 소유권 인정(2010년) 등에 따른 부동산 투자 활황,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건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며 대규모 외국 자본 유입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음.

- 캄보디아 국토개발부에 따르면, 2019년 건설사업 투자규모는 93.5억 달러(4,446건)로 전년 대비 79.1% 증가하였음. 한편, 2000~2019.7월 기간 중 외국 기업에 대한 건설사업 승인

3) ADB, "Do Women Benefit from FDI? FDI and Labor Market Outcomes in Cambodia", March 2020

규모⁴⁾는 총 62억 달러(421건)이며, 중국 기업이 건설시장을 주도(28.8억 달러, 175건)하는 것으로 나타남(캄보디아 건설 협회).

- 한편,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프놈펜 신공항(중국), 시아누크빌 항만 확장(일본), 국립의대 부속병원 건설(한국) 등 주요국의 외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 (관광업) 앙코르와트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자원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관광업은, 요식업·운송업 등 연관산업 고용효과 및 FDI 유치 측면에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임. 세계 관광협회⁵⁾는 캄보디아를 ASEAN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관광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았음.

- 캄보디아 관광부에 따르면, 2019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인 전년 대비 6.6% 증가한 661만 명, 관광수익은 13% 증가한 49.2억 달러로 파악됨.

4) 한국무역협회. 외국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자본을 투입할 경우 내국인 투자로 집계되므로, 건설업 분야의 실제 FDI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5)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20 Annual Research", March 2020. 항공, 숙박, 요식업, 쇼핑물 등 관광업과 연계된 직·간접 서비스 부문을 모두 포함한 결과, 2019년 관광업이 캄보디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4%로 산출됨(필리핀 25.3%, 태국 19.7%).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마비, 각국 정부의 봉쇄 조치와 이동 통제에 따른 내수 감소 등으로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5.0%, 전 세계 교역 증가율은 -11.6%의 대규모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초기대응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캄보디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모두 약 4~9%p 수준의 경제성장률 하락⁶⁾이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 경제 또한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된 198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봉제산업) 봉제품 주요 수출대상국인 유럽과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주문 취소감소로 금년 4~5월 중 전국 의류·신발 공장의 약 12%(130개/1,087개, EIU)가 영업을 중단 또는 폐업 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수요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년 1~5월 중 봉제품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한 37.8억 달러에 그쳤음.

6) IMF(2019년 및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미국(2.1% → -4.3%), EU(1.3% → -8.3%), 중국(6.1% → 1.9%)

- 또한, 의류, 신발, 여행용품, 사탕수수 등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EU의 무관세 혜택(EBA)⁷⁾이 2020년 8월 12일자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對EU 수출품의 약 20%(10억 유로 상당)에 대해 통상 12%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2020년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9.6% 감소할 전망이며, 경영난에 따른 공장 폐쇄, 실업률 상승 및 시위 빈발 등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도 우려되고 있음(EIU).
- (건설업) 외국인 투자자를 겨냥한 호화 상업·주거시설 개발이 주를 이루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변질되었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금년 1분기 건설 부문에 대한 FDI 승인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0.2% 감소하였음. 또한, 지난 3월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 대응예산 마련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잠정 중단키로 함에 따라 금년 총고정투자는 2.5% 감소할 전망이다.
- (관광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 및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 코로나 감염 우려에 따른 여행객들의 소비심리 냉각 등으로 관광수입 또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3월 ADB는 코로나19 여파로 캄보디아의 관광수입이 최대 856백만 달러(GDP의 3.1% 수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EIU는

7)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관세특례제도로,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혜택 제공. 단, 수혜국의 인권, 노동권 등에 대한 국제협약 위반사례 적발시 중단조치가 가능함. EU는 캄보디아 등 아시아 8개국을 포함, 저개발국 48개국 앞 EBA 시행 중

관광객 수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3~4년(20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함.

- 2020년 1~5월 중 캄보디아 방문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59.5% 감소하였으며, 여행 제한 조치가 발효⁸⁾된 4~5월 중 방문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98.5% 감소하였음. 한편, 금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 예정이던 ASEM 정상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추가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20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은 전망기관별 편차는 있지만 평균 -2.0~-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21년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각국 봉쇄조치 완화, 교역 및 투자심리의 점진적 회복,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표 3〉 캄보디아의 2020~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WB	IMF	ADB	EIU	IHS	캄보디아 정부
2020	-1.0	-2.8	-4.0	-1.7	-5.0	-1.9
2021	6.0	6.8	5.9	1.3	3.8	3.5

출처: 각 기관 발표자료(World Bank는 Baseline 시나리오 기준)

8) 캄보디아 정부는 3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미국·스페인·이탈리아·이란·독일·프랑스 등 코로나19 확산률이 높은 국가의 여행 목적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으며, 모든 외국인 입국자 앞 2천 달러 상당의 예치금(코로나19 진단·치료 등) 징구, 현지 의료보험(90달러) 구매 의무화 등의 여행 제한 조치는 지속 실시 중

○ 한편, 캄보디아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의 특성상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캄보디아 경기 침체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IMF에서 코로나 발생 전(2019.10월)과 후(2020.4월 또는 6월)에 전망한 ASEAN 회원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비교시, 캄보디아, 필리핀 및 태국의 전망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IMF의 ASEAN 회원국에 대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변동치 비교(%)

국가 전망일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브루 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2019. 10월(a)	6.8	5.1	4.4	6.2	1.0	3.0	4.7	6.5	6.5	6.3
2020. 4월(b)	-1.6	-0.3 ^{주)}	-3.8 ^{주)}	-3.6 ^{주)}	-3.1	-7.7 ^{주)}	1.3	2.7	0.7	1.8
변동치 (b-a)	-8.4	-5.4	-8.2	-9.8	-4.1	-10.7	-3.4	-3.8	-5.8	-4.5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9/April 2020/June 2020

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2020년 6월 전망치 적용

□ 국제유가 하락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 전망

○ 지속적인 고도성장,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제고 등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달러 통용화(Dollarization)로 인해 환율 변동에 따른 물가 등락 위험이 일정 부분 상쇄되고 있음.

○ 달러 통용화는 경제 전반에 공식 화폐가 아닌 달러화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현상으로,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루즈 정권(1975~1979년) 당시의 사유재산 및 화폐 철폐 조치로 인해 1980년 재도입된 리엘화(Riel)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가운데, 달러나 금 등 대체거래 수단이 각광을 받게 됨.

- 1992년 캄보디아의 체제 안정화를 위한 UN 평화유지군 설립 과정에서 달러화가 대량 유입된 이후 수출입, 국제원조, FDI 등을 통해 유입된 달러화가 시장 내에 자리잡은 결과, 현재 전체 유동성의 80% 이상⁹⁾이 달러화로 통용되는 반면, 공식화폐인 Riel은 거스름돈이나 소액거래에 활용되는 실정임.

-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달러 통용화의 이점과 통화주권 회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점진적으로 리엘화 이용률 제고 정책을 펼쳐왔음. 세금계산서의 리엘화 표시 발행 의무화(2019.4월~), 리엘화 대출비율 상향(최소 10%, ~2019.12월), 중앙은행앞 10달러 미만 소액 달러권 예치시 수수료 부과(2020.9월~) 등이 일례임.

○ 2019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료 가격 안정에 따른 운송비 하락, 상반기 중 음식료품 가격 안정선 유지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2.0%를 기록하였음.

9) 캄보디아 중앙은행. 2020년 5월 말 기준 M2 통화량의 83.6%가 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금 중 외화표시 예금 비율은 92.1%에 달함.

○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둔화 등 물가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홍수 피해에 따른 식료품 및 운송비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를 기록할 전망이며, 원자재 국제가격 회복 추이에 따라 점차 물가가 상승하여 2021년에는 연평균 2.9%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20년 4월 브렌트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2001년 이후 최저치인 19.33달러까지 폭락하였으며, OPEC(원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합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42달러, 2021년 45달러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EIU).

- 글로벌 경기 침체, 외국인 투자심리 냉각 등으로 봉제산업과 관광업 부문의 대량 실업 및 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까지 가중됨에 따라 민간소비(2019년 GDP의 68.9%) 증가율은 예년의 5~6% 수준에서 2020년 -0.3%로 하락할 전망이다.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악화 예상

○ 캄보디아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 정부의 세수 현대화 전략 추진에 따른 징세 효율화, 납세 누락분 감소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조세 수입에 의존하는 점, 정상적 지출¹⁰⁾이 총지출의 약 65%에 달하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2014년부터 5개년 단위의 세수 현대화 전략 (Revenue Modernization Strategy)을 시행하면서 세수기반 확대 및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세제 시스템 자동화·효율화, 납세자 등록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세제 전면 검토 등 세수 현대화 전략에 따른 세부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19년 세수는 60.3억 달러 규모로 처음으로 GDP 대비 세수 비중이 20%를 초과 (22.2%)하였음.
- 한편, IMF는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재산세율의 점진적 인상 등을 통해 현재 GDP의 0.1%에 불과한 정부의 재산세 수입을 GDP의 0.6% 수준까지 제고¹¹⁾할 것을 권장하였음. 또한, 향후 세수기반 강화를 위해 우대세제 전면 재검토, 자본소득세 신설 (중장기) 등을 권고함.

10) World Bank,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nance in Cambodia", June 2019. 정상적 지출항목 중에서도 공공 부문 임금 지출 비중(2019년 정부예산의 30.5%)이 절대적으로 높고, 정부지출이나 정부수입 대비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점을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함.

공공 부문 임금(2016)	캄보디아	아태평양	EU	저소득국	중소득국	고소득국
GDP 대비 비중(%)	6.7	6.6	9.9	7.0	8.7	10.4
정부지출 대비 비중(%)	30.6	27.5	25.4	25.8	31.8	28.0
정부수입 대비 비중(%)	34.5	22.9	25.3	26.8	28.2	25.9

11) IMF, "Advancing Inclusive Growth in Cambodia", September 2019. GDP 대비 재산세 수입 비중을 0.1%에서 0.6%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을 0.5%p 확대시, 경제성장률은 2.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캄보디아의 연도별 재정수지 및 조세수입 추이(GDP 대비 비중,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정수입	12.5	16.3	17.6	19.1	18.5	19.8	20.4	21.6
조세	10.2	11.3	12.9	15.5	15.6	15.8	16.9	18.8
재정지출	17.9	20.7	20.3	20.4	19.4	20.2	21.4	21.4
재정수지	-5.4	-4.4	-2.7	-1.3	-0.9	-0.4	-1.0	0.2

출처: IMF, “Staff Report for the Article IV Consultations”, 2015~2019 및 EIU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반면, 봉제산업·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영 부진,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세금우대 정책 등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4%로 확대될 전망이다.

-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정부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하였음. 이는 글로벌 교역 침체에 따른 봉제품 수출 감소 및 내수 둔화로 관세·소비세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반면, 같은 기간 중앙정부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8.3%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규모는 2019년 말 2.2억 달러에서 2020년 6월 말 1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2021년 재정적자 비중은 홍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재정지출로 GDP 대비 2.4%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2023년 총선에 따른 복지성 예산 확대 가능성으로 2023년까지 재정적자가 GDP 대비 4%대에 머물 전망이다.
- 한편,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외자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GDP 대비 공적외채

비중¹²⁾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EIU는 대부분의 차입금을 중국계 국영은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며, 외채잔액이 2021년 178억 달러(OECD는 171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표 6〉 캄보디아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요약)

예산 규모	3월 10일, 코로나 대응을 위해 8~20억 달러 편성 발표 (2020년 9월 기준 15.3억 달러 편성)
주요 내용	• 관광업·항공업에 대한 세금 감면 : 2020년 9월 限
	• 최빈층(61만 가구)앞 매월 현금 지원 : 도심 30달러, 농촌 20달러
	• 노동자에 대한 40달러 임금 보조 : 봉제업은 고용주가 30달러 추가 지급
	• 부동산 소유권 양도세(4%) 면제 : 2021년 1월 限
	• 신용보증기금앞 2억 달러 금융 지원, 운영자금 대출이율 인하 (6% → 5%) 등

2. 대외거래

〈표 7〉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 상 수 지	-1,733	-1,778	-2,896	-4,064	-6,419
경 상 수 지 / GDP	-8.7	-8.0	-11.9	-15.2	-24.4
상 품 수 지	-3,846	-4,249	-5,844	-7,255	-7,408
상 품 수 출	10,273	11,253	12,963	14,987	13,543
상 품 수 입	14,119	15,502	18,807	22,242	20,951
외 환 보 유 액	8,245	11,105	13,220	16,880	13,804
총 외 채	11,204	13,016	15,336	15,858	16,426
총외채잔액/GDP	56.0	58.7	62.8	59.3	62.4
D.S.R.	5.2	3.4	4.2	10.3	14.1

출처: IMF, EIU

12)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s-Debt Sustainability Analysis”, November 2019. GDP 대비 공적외채 비중(2018년)은 28.6%로 낮은 편임. 한편,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GDP 대비 공적외채(현재가치) 비중은 2019년 22%에서 2020년 40%로 급증하나, 이는 경제성장률 0%, 총수출증가율 2.5%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2020년 예상 경제지표(경제성장률 -1.7%, 총수출증가율 -29.8%) 고려시 이보다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관광업 위축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폭 축소로 경상수지 대폭 적자 우려

○ 캄보디아는 최근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상품 수출이 연평균 13%씩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원자재 및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가운데 건설업 활황 및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도 증가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관광업 호조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매년 경상수지 적자 폭을 일부 만회하고 있음.

〈표 8〉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억 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상품수지	-38.5	-42.5	-58.4	-72.6	-74.1
서비스수지	16.0	18.6	23.9	28.1	6.8

출처: EIU

○ 2020년에는 유가 등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민간투자 위축에 따른 건설 부문 중간재 수요 감소 등으로 상품 수입이 전년 대비 5.8% 감소할 전망이나, EU·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수요 감소로 상품 수출이 더 크게 감소(전년 대비 -9.6%) 하면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이에 더해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에 따른 관광수입 타격으로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전년의 약 1/4로 대폭 감소할 전망임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됨.

- 중국과의 FTA 체결, 글로벌 교역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상품수출은 2021년부터 서서히 개선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 재개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2021년에도 GDP 대비 -20%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 유지

- 캄보디아는 매년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음. 2019년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169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음.

〈표 9〉 캄보디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억 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유입액 (증가율)	24.8 (35.8%)	27.9 (12.5%)	32.1 (15.2%)	37.1 (15.5%)
GDP 대비 비중(%)	12.4	12.6	13.1	13.7

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June 2020 및 EIU

- 한편, 2020년에는 수출, 관광수입 등 외화수입원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감소할 전망¹³⁾임에 따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년 대비 줄어든 138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임.

13)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2020년 1분기 외국기업 앞 승인한 투자사업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4.1% 감소한 5.8억 달러 규모로 확인

- 이는 월평균수입액 대비 6.9개월, 단기외채잔액의 4.7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9년의 7.3개월, 5.7배에 비해 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단기 상환불능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외채 비중은 경제규모 대비 양호한 수준

-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에 수반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외채잔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60% 내외를 지속 유지하고 있음.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외채 중 중장기채무의 비중이 81.5% (2019년)로 외채구조는 안정적인 편임.
- 2019년 이후 연간 외채원리금상환액이 20억 달러를 초과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임에 따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등 수출 관련 외채지표는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2021년에는 수출 회복 기조에 힘입어 해당지표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표 10〉 외채 관련 지표 추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2021 ^f
외채원리금상환액 (억 달러)	7.7	5.5	8.0	22.4	22.9	23.1
D.S.R.(%)	5.2	3.4	4.2	10.3	14.1	12.6
총외채잔액/ 총수출(%)	76.3	80.0	80.8	72.7	101.4	92.7

출처: OECD, EIU

- 한편, 2020년 4월 Moody's는 캄보디아가 국제기구나 주요 교역국을 통한 우호적 성격의 자금(원조자금)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재원 마련으로 외채잔액이 늘어나더라도 정부수입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이 동일신용등급(B) 국가군 대비 현저히 낮은 3% 이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III. 경제구조 및 정책

1. 구조적 취약성

□ 점진적 산업다각화, 안정된 환율은 구조적 한계의 돌파구 역할

- 캄보디아는 저렴한 인건비와 선진국의 무역특혜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봉제산업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였으며,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도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음.

- EIU에 따르면, GDP 대비 농업 부문의 비중은 2000년 35.9%에서 2019년 20.5%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등 2차산업의 비중은 21.9%에서 33.6%로 상승하였음.

- 또한, 달러 통용화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폭(최근 3년, $\pm 0.5\%$ 이내)이 작아 외국인투자 유치에 효과적임.

□ 봉제산업에 편중된 제조업의 고도화 노력 필요

- 봉제산업은 2019년 전체 수출액의 74.3%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표산업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연평균 고용인원이 94.1만 명(전체 노동자의 10.7%)에 달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여도 상당함.

〈표 11〉 2019년 주요 품목별 수출비중(%)

품목	의류·신발	자전거	쌀	전기기기	고무	목재가공	자동차부품	기타	합계
비중	74.3	2.9	2.9	1.8	1.5	1.1	0.6	15.0	100

출처: 캄보디아 중앙은행

- 단, 봉제품의 제1위 수입국인 EU가 캄보디아의 인권, 노동권, 정치 및 언론 탄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2001년부터 부여해 온 EBA 혜택 일부(봉제품 포함)를 2020년 8월 12일자로 잠정 중단 하였음.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세 혜택 향유가 가능한 주변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EU는 2018년 총선을 전후하여 자행된 제1야당 강제 해산, 언론사 폐간 및 인권 탄압 등을 강력 비판, 2019년 2월 EBA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하였으며, 2020년 2월 캄보디아 수출품 일부에 대한 EBA 잠정 중단(6개월 유예조치)을 결정하였음.
 - 반면,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등 봉제산업 경쟁국은 여전히 EBA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2019년 6월 베트남이 EU와 FTA를

체결(2020년 발효 예상)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한편, 전력 부족¹⁴⁾ 등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정치적 이익과 맞물린 최저임금 지속 인상으로 주변국 대비 생산성 및 임금경쟁력 열위에 처한 실정임.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수입국의 경기 둔화로 봉제품에 대한 수요마저 감소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불가피함.
- 봉제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2020년 월 190달러 수준(2021년은 192달러로 확정)임. 이는 캄보디아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높은 베트남(호치민·하노이 등 1지역, 약 190달러)과 유사하며, 경쟁국인 라오스(약 119달러), 방글라데시(약 105달러), 미얀마(약 98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¹⁵⁾임.

〈표 12〉 봉제산업 최저임금(월급) 인상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저임금(달러)	100	128	140	153	170	182	190	192
인상률(%)	25.0	28.0	9.4	9.3	11.1	7.1	4.4	1.1

출처: 캄보디아 정부 발표자료

14) JETRO, “2020 아시아·오세아니아 진출 일본계 기업 동향”, 2020년 2월. 캄보디아의 전력 자급률은 86%에 달하나, 발전설비의 52%(2017년 기준)가 수력발전설비로 구성되어 가뭄·폭염시 전력공급 중단이 잦음. 2019년 건기(3~5월)에는 프놈펜 180시간, 바벳 특별경제구역 300시간 등 대규모 정전 발생

15) 각국 정부 발표자료. 베트남(442만동/월), 라오스(110만킵/월), 방글라데시(8,875타카/월), 미얀마(4,800껏/일) 최저임금에 2020년 예상평균환율(EIU) 적용

□ 건설·부동산 투자 붐에 따른 금융 부문의 과열 우려

○ 평균 8~10%(소액금융기관은 14~19%)의 높은 예대마진, 달러 통용화에 따른 낮은 환리스크 등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캄보디아 내 금융기관은 2010년 60개에서 2019년 144개¹⁶⁾로, 같은 기간 금융기관 총자산은 66.6억 달러에서 510.4억 달러로 7.6배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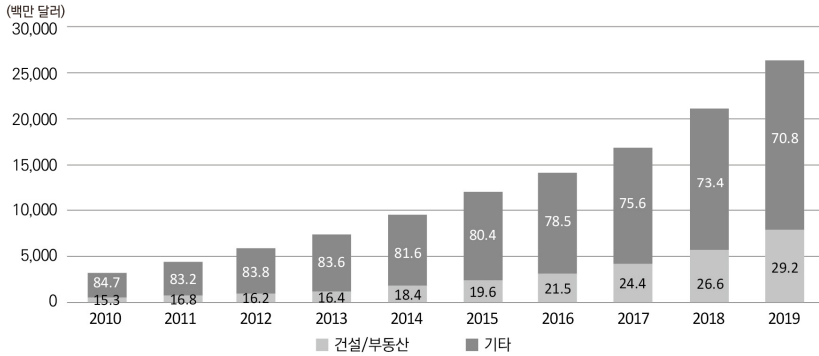
-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수준 제고 등으로 민간 부문 여신잔액은 2010년 31.6억 달러에서 2019년 264억 달러로 8.4배 증가(연평균 증가율 26.6%)하였음.

- 급속한 여신 증가 현상은 건설·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에도 기인함. 2019년 부동산 부문에 대한 FDI 유입액은 4.4억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20.9%, 2013년(1억 달러) 대비 4.4배 증가한 규모임. 한편,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건설·부동산 부문에 대한 여신잔액은 2010년 이후 연평균 35.7%씩 증가하여 2019년 77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전체 민간여신 대비 비중도 15.3%에서 29.2%¹⁷⁾로 늘어남.

16) 캄보디아 중앙은행, "Annual Supervision Report 2019", April 2020. 상업은행 47개, 특수은행 15개, 소액금융기관 82개로 구성

17)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s-Debt Sustainability Analysis", November 2019 및 EIU. 금융기관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제공현황은 파악규제가 어려우며, 국내 부동산 가격 관련자료 관리도 미비. 이에 실제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그림 2〉 캄보디아의 총여신 및 건설·부동산 부문 앞 여신 지원 추이
(2010~2019년)



출처: 캄보디아 중앙은행

- 금융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GDP 대비 민간여신 비중이 97.5% 까지 증가하였는 바, 이는 캄보디아의 금융산업 발달 정도나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편으로 보임. 한편, 민간여신에서 부동산 관련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거품 붕괴시 금융시장 연쇄충격이 우려되고 있음.

〈표 13〉 ASEAN 회원국의 GDP 대비 민간여신 비중 비교(2019년, %)

태국	베트남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143.3	137.9	120.9	120.8	97.5*	47.6	37.8	35.7	25.7	20.9

출처: World Bank, 필리핀은 2018년, 라오스는 2010년 기준.

* 2010년 GDP 대비 민간여신 비중은 28.1%

- 관광객 급감, 호화 부동산 초과 공급, 중국 등 주요 투자국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는 부동산 매매·임대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EIU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중 중·고급 주상복합건물 임대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7.3%, 5.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량 실업 및 소득 감소로 개인 담보대출의 상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¹⁸⁾.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3개월 간 이자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중앙은행은 각 금융기관 앞 대출금 상환 연장 또는 채무 리스케줄링을 독려했음.
- Moody’s는 금융감독체계나 규제 정비 속도에 비해 여신잔액 팽창 속도가 빨라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캄보디아의 과도한 달러 통용화 수준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 등 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위험성을 강조함.
- IMF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정보 시스템화, 부동산 대출에 대한 높은 위험가중치 부여, LTV 규제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체계 도입, 여신 증가속도 억제 등을 제시 하였음.

18) 2017년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일반 소비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상한제(연율 18% 이상 부과 금지)를 도입함.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협회(Cambodian Microfinance Association)에 의하면, 소액금융기관들은 과거 최고 연 40%까지 부과했던 대출금리에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건당 대출규모를 2천 달러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임. 반면, 캄보디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643달러(2019년)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들이 근로소득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경제 전반의 對중국 의존도 심화

- 2011년 EU의 원산지 제한 조항 폐지 이후 봉제품 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의 절반 이상(약 60%)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2013년 일대일로 사업 시작과 함께 중국의 인프라 부문 투자 및 원조자금 지원도 급격히 확대되었음.
-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상품수입국(37.4%)이자 관광수입원(총 관광객의 35.7%)이며, 최대 채권국(공적외채잔액의 48.7%, 2018년)임.
- 중국은 봉제업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시아누크빌 휴양도시 개발,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부동산 투자 부문의 약 60%를 담당하면서 최대 투자국(37.7%, 승인 기준)으로 부상하였음.

〈표 14〉 캄보디아에 대한 연도별/국가별 직접투자 추이
(승인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 국	435.8	543.8	240.6	697.3	1,437.3	2,700.1	1,321.4
홍 콩	111.3	93.9	109.2	249.2	85.4	81.6	916.5
영 국	84.4	86.8	115.1	35.7	49.0	10.3	821.5
대 만	85.2	29.1	46.5	21.1	23.3	33.3	57.7
한 국	81.8	65.2	8.5	17.6	149.5	14.6	25.1
총승인액	1,215.6	1,024.4	784.6	1649.0	2,041.0	3,837.8	3,504.3

출처: 캄보디아 중앙은행,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이처럼 주요 부문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7월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짐에 따라 중국의 경기 둔화시 캄보디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 중국 차관은 국제기구의 원조성 자금에 비해 대출만기가 짧은 만큼,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경제규모가 작은 동남아 저소득국 및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동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¹⁹⁾이 제기되고 있음.

2. 성장잠재력

□ 젊은 인구구조와 아세안 진출의 거점 역할이 가능한 입지조건

-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65.2% 수준임. 단, 14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3(30.2%)에 달해 향후 수년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잠재적 노동력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 발달의 핵심 요건으로 기능함.

19) 국제금융센터, “中 일대일로와 신흥국 부채 리스크 점검”, 2020년 5월. 캄보디아, 라오스 등 GDP 대비 對중국 차입금 비중이 높은 8개국 지적

〈표 15〉

캄보디아의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	0~14	15~24	25~54	55~64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비율(%)	30.2	17.3	41.5	6.4	4.6

출처: CIA, The World FactBook(2020년 추정치)

○ 한편, 캄보디아는 신흥 투자처로 부각되는 ASEAN 10개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ASEAN 역내외 FTA 및 선진국 무역특혜 수혜 등에 따른 관세 혜택 향유가 가능하여 동남아 밸류체인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좁게는 메콩 강 일대의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직결되며, 넓게는 해로를 통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이에 최근 해외 투자자들은 캄보디아에 단순부품 조립공장 등 노동집약적 공장을 설립하여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에 확보한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을 우회수출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모색하고 있음.

□ 기업 친화적인 투자여건 조성

○ 캄보디아 정부는 1994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후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를 중심으로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특별경제구역 지정·운영, 내국인과 동등한 투자세법 적용(토지 소유 문제 제외), 외국인

출자비율 100% 허용, 경쟁국 대비 낮은 법인세율(20%) 부과, 투자
적격 프로젝트의 관세 및 법인세 면제(최장 9년) 등이 일례임.

○ 2018~2019년에는 EU의 EBA 관세혜택 철폐에 따른 수출·영업
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물류비용 인하, 통관절차 간소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함.

- 2018년 8월 캄보디아 정부는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지속 유인할 목적으로 2020년
부터 공휴일을 기존 28일에서 22일²⁰⁾로 감축 운영기로 결정함.
- 2018년 12월에는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
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5~20% 인하하기로 하였음. 한편,
2020년 5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6개월
간 제조업·서비스업·상업·농업 등 4개 산업 부문에 대한
전기요금의 25% 추가 인하를 결정함.
- 2019년 초에는 수출입 통관체계 일원화,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검사 수수료 인하, 對EU·미국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폐지
등의 개선 조치를 단행하였음.
- 특히, 2019년 3월 훈센 총리 주재로 거행된 제18차 민관협력
포럼에서는 수출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책이 논의되었는 바, 이후 관세청과 기능중복 기관

20) EIU. 라오스(9일), 베트남(11일), 말레이시아(통상 14일), 방글라데시(15일), 태국(20일)
등 남아시아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편임.

(CamControl) 폐지, 온라인 VAT 시스템 도입, 세무감사 축소, 중소기업 대상 관세혜택 제공, 프놈펜항·시아누크빌항 등 항만 이용 수수료 인하 등 민간 부문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개선책을 발표함.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법 개정안을 준비 중임. 동 투자법은 중국·한국 등 신규 FTA 가시화 시점에 맞추어 발효될 계획으로 금년 중 국회 의결이 예상됨.
- 정부의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매년 1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UNCTAD에 따르면, 2019년 48개 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중 캄보디아가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남.

□ 원유 시추 프로젝트를 통한 에너지 자립 노력

- 캄보디아 정부는 1995년 태국만 연안의 자국 영해에서 발견된 해상 유전²¹⁾에서 원유 시추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2020년 말부터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자체 전망 중임.

21) 해상 유전 6개 블록, 육상 유전 19개 블록 보유. KrisEnergy가 시추 중인 A 블록의 원유 매장량은 3천만 배럴로 예상됨.

- 원유 시추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정부의 사업 경험 부족, 국제유가 변동 및 사업 참여 기업 변경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2018년 10월 싱가포르 석유 및 가스회사 KrisEnergy가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KrisEnergy는 당초 원유 생산 개시기한을 2020년 6월로 잡았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본건 시추 작업도 난항을 겪었음. 단, 2020년 8월 말 현재 해상 시추 플랫폼이 완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20년 말부터 생산(7,500배럴/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 석유개발사와 관할 당국의 역할 및 수익 배분 등을 규정한 '석유 및 석유제품관리법'을 제정하였음. 한편, 중국 자본과의 합작투자로 유전 인근에 정유공장 건설(2021년 생산 시작, 연 200만 톤에서 500만 톤까지 증산 예정)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정책성과

-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등을 통한 고도 경제성장 추진
 - 캄보디아는 2004년 국가 경제·사회 개발 핵심정책인 사각전략 (Rectangular Strategy)을 도입하여 5년 단위로 재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4기 전략(Phase IV, 2019~2023년)을 추진 중임.

○ 사각전략은 2030년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y), 2050년 고소득국(High Income Country)²²⁾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장, 고용, 형평, 효율”이라는 4대 기치 하에 주요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표 16〉 캄보디아의 4기 사각전략(2019~2023년) 주요내용

4대 전략목표	4대 전략분야
① [성장] 7% 성장률 유지	① 인적자원 개발 - 교육·과학·기술 개발, 직업훈련 강화, 공중보건·영양상태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② [고용] 고용의 양적 및 질적 성장	② 경제 다변화 - 수송·물류 체계 개선, 경제성장동력 발굴, 디지털 경제 구축(산업혁명 4.0), 금융 부문 개발 등
③ [형평] 빈곤율 10% 이하로 축소	③ 민간 부문 개발·고용 촉진 - 고용시장 개발 및 노동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PPP사업 다변화 등
④ [효율] 공공기관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	④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농촌 지역 개발, 도시화 촉진, 지하자원 및 관광·문화자원 개발, 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출처: 캄보디아 정부,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Building the Foundation toward Realizing the Cambodia Vision 2050 Phase IV”, September 2018

22) World Bank 소득 분류(2019년 1인당 GNI 기준) : 저소득국(1,035달러 이하), 하위 중소득국(1,036~4,045달러), 상위중소득국(4,046~12,535달러), 고소득국(12,536달러 이상)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사각전략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5개년 국가전략 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9~2023)을 병행 중임.
 - 동 계획은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 육성, 신용평가사 창설, 기업 등록·수출입 절차 간소화, 부동산 관련 여신 감독 강화, 중소기업 창립 지원,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 민관협력포럼 확대 운영, 치안 강화 등 사각전략과 연계한 세부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개발정책 추진에 힘입어 캄보디아는 최근 20년 간 연평균 7.7%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국가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1인당 국민총소득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하위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y)에 편입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음. 또한 빈곤율도 2004년 53.2%에서 2018년 12.9%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달러 통용화의 영향으로 인해 통화정책 효과는 제한적

-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물가 및 환율 안정을 목표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감독기능도 병행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지난 3월에는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및 민간 부문 대출 활성화를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정책을 발표함.

- 현행 달러화 12.5%, 리엘화 8%로 운영 중인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을 2020년 10월까지 7%로 일괄 하향 적용하고, 자본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version Buffer) 규제비율(Tier1 자본비율(7.5%) 포함 8.75% → 10.0%) 달성기한을 당초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하였음.
- 또한, 은행간 리엘화 대출상품인 유동성제공담보운영(Liquidity Providing Collateralized Operation) 이율을 만기별로 0.5%씩 인하하여 리엘화표시 대출금을 주로 이용하는 농민들 앞 유동성공급을 도모함.

○ 다만, 타국 대비 높은 수준의 달러 통용화 현상으로 인해 통화주권이나 금융정책의 독립성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 World Bank²³⁾는 캄보디아의 경우 재정정책이 거시경제 안정 도모를 위한 거의 유일한 정책수단이며, 이에 재정건전성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23) World Bank,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nance in Cambodia", June 2019

IV.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 훈센 총리의 장기집권으로 정권 안정성 확보

○ 2018년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125석 전(全) 석을 차지하였음. 1985년 총리직에 취임한 훈센은 금번 선거에서의 승리로 2023년까지 총 38년 간 장기집권하게 되었으며, 정권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한편, 총선 과정에서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RP)이 강제 해산(후술)됨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 반정부 시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 · 언론 탄압 등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

○ 훈센 총리는 총선 승리 및 통치기반 장악을 위해 야당과 언론을 조직적으로 통제해 왔음.

-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였던 삼랭시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15년 해외로 망명하였으며, 2017년 2월 여당이 CNRP 해체를

목적으로 정당법을 개정²⁴⁾하자 당 해체를 막기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였음.

- 삼랭시에 이어 CNRP 대표직을 맡은 켐소카는 2017년 9월 외국 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음. 2017년 11월 CNRP도 新 정당법에 따라 강제 해산되었으며, 당 소속 정치인 118명의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되었음.
 - 한편, 언론 통제도 자행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폐간(캄보디아인 데일리) 및 해외 매각(프놈펜 포스트)을 유도하였으며, 선거를 앞두고 자유언론(Voice of America, Radio Free Asia) 방송 폐쇄 및 소속 직원 감금, 동 프로그램을 송출한 라디오 방송국(19개) 강제 폐쇄를 단행하였음.
 - 이에 따라 2018년 총선은 제1야당 없이 실시되었음. 이러한 총선 과정은 EU,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 국가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으며, EU와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제재 검토에 착수하였음.
- 한편, 집권여당 내부에 뚜렷한 승계구도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훈센 총리(69세)의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요소가 잠재하고 있음.

24) '형사기소된 자는 정당의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없으며, 유죄판결 후 90일 이내에 새 대표를 뽑지 않으면 정당의 강제 해산이 가능하다'가 주요 골자임.

- 훈센은 장남인 훈마넷(캄보디아 육군 총사령관)에게 점진적으로 권력을 위임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CPP는 훈마넷을 당내 청년의원 당수로 선출하였음. 단, 훈마넷의 정권 세습 현실화시 원로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치인·언론인 등 체포 및 방면 반복으로 정치적 혼란 우려

- 2018년 총선 승리 이후에도 정권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반정부 세력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 2019년 8월 삼랭시는 훈센 정권 타도 및 민주주의 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캄보디아 독립기념일(11월 9일)에 맞춰 귀국을 시도 하였으나, 정부가 태국, 베트남, 라오스를 포함한 ASEAN 회원국 전체에 체포영장을 발송하고 삼랭시 귀국 즉시 체포를 공언함에 따라 귀국 기도가 좌절되었음.

- 삼랭시 귀국 선언 이후 50명 이상의 前 CNRP 당원들이 체포 되었음. 한편,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6월 삼랭시가 “토지주택을 매각하면서 까지 채무를 상환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자, 훈센 총리는 CNRP가 국가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前 CNRP 당원의 반정부 활동 색출시 즉각 체포를 공언하였음.

- 반면, EU의 EBA 관세 혜택 복원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정치적 위협이 크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기소를

기각하거나 석방하는 등 ‘냉온’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2019년 10월 캄보디아 법원은 2017년 간첩혐의로 체포한 Radio Free Asia 직원 2명에 대한 평결(징역 7~15년)을 유보하고 재조사를 명하였음. 또한, CNRP 원내 대표로 활동했던 유력 정치인 손차이를 포함, 10여 명의 전직 야당의원에게 대한 정치 활동 금지령이 해제된 것으로 파악됨.
- 2018년 9월 캄소카는 보석 석방되어 가택연금에 들어갔으며, 2019년 11월 정치 활동 및 출국 금지 등을 전제로 가택연금이 해제되었음. 2020년 1월 프놈펜 지방법원은 캄소카의 반역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중단됨. 한편, 지난 5월 훈센 총리와 캄소카가 비정치적 회합을 가졌으며, 이에 따라 캄소카에 대한 기소 취하 및 제한적 정치 활동 인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사회동향

□ 빈곤 감소 및 복지 개선 추세는 계속되나 주변국 대비 저조

- 캄보디아 정부의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2018년 GDP 대비 1% 수준(전 세계 평균 1.6%)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봉제 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한 것에 더하여 2018년에는

월 1회 지급하던 임금을 월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퇴직시 지급 하던 근속보상금을 매년 일정액씩 선지급 및 2018년 이전에 발생 (최대 10년치)한 근속보상금의 소급 지급 등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함.

○ 이러한 사회보장 개선 노력에 힘입어 캄보디아의 1인당 GNI는 2014년(1,020달러) 최초로 1,000달러를 상회한 이후 연평균 7.7%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9년 1,480달러를 기록하였음.

- 한편, UN의 인간개발지수가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기대수명은 2000년 56.4세에 2018년 69.6세로 늘어났고, 출생아 1,000명당 5세 이하 사망률이 2000년 106.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아울러 15~49세 인구 중 에이즈 환자 비율도 2000년 1.2%에서 2019년 0.5%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복지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표 17〉 캄보디아의 인간개발지수 및 관련지표 개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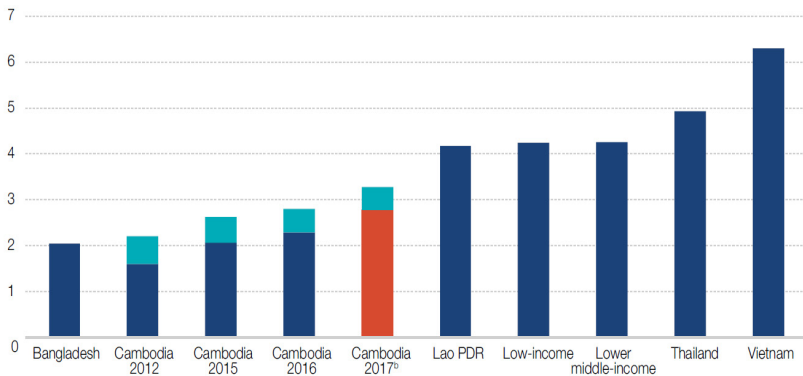
구 분	인간개발지수 (점수/순위)	기대수명 (년)	평균교육 기간(년)	기대교육 기간(년)	1인당 GNI (PPP 기준, 달러)
2000	0.543 (130)	56.4	n.a.	n.a.	1,040
2010	0.494 (124)	62.2	5.8	9.8	1,868
2014	0.555 (143)	68.4	4.4	10.9	2,949
2018	0.581 (146)	69.6	4.8	11.3	3,597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Report 해당연도 자료

○ 단, 동 기간 중 국가별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지속 하락하여 타국 대비 사회복지 수준 발달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됨. 2018년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ASEAN 국가 중 최하위인 146위로, 이는 아시아 전역에서도 네팔(147위), 파키스탄(152위), 아프가니스탄(170위)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임.

- 특히, 교육 부문의 경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교육 부문 공공지출이 2010~2012년 평균 1.6% 수준에서 2017년 2.8%까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저소득국 평균(4.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 국가별 교육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비교(GDP 대비 비중, %)



자료: World Bank,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nance in Cambodia”, June 2019, 타국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 기준

* 남색·적색 부분은 공공지출, 청록색 부분은 국제원조자금에 의한 지출을 의미함.

- 한편, UN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전 세계 공중보건 실패를 점검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을

보건 시스템 취약국으로 지적하였음.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병상(인구 1만명 당 8대) 및 간호사(인구 1만명 당 10명) 확보 수준은 주변국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비교

FIGURE 2: PREPAREDNESS DASHBOARD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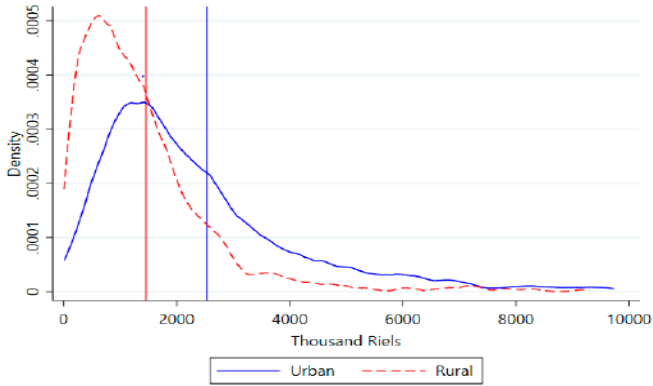
Low to high	Human Development			Health System			Connectivity		
	Human development index (HDI)	Inequality-adjusted HDI (IHDI)	Inequality in HDI	Physicians	Nurses and midwives	Hospital beds	Health expenditure	Mobile phone subscriptions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index) 2018	(IHDI) 2018	(percentage) 2018	(per 10,000 people)	(per 10,000 people) 2010-2018	(per 10,000 people)	(% of GDP) 2016	(per 100 people)	(per 100 people) 2017-2018
Singapore	0.935	0.810	13.3	23.1	72	24	4.5	145.7	28.0
Brunei Darussalam	0.845	17.7	66	27	2.3	131.9	11.5
Malaysia	0.804	15.1	41	19	3.8	134.5	8.6
Thailand	0.765	0.635	17.0	8.1	30	21	3.7	180.2	13.2
Philippines	0.712	0.582	18.2	12.8	2	10	4.4	110.1	3.7
Indonesia	0.707	0.583	17.5	3.8	21	12	3.1	119.8	3.3
Viet Nam	0.693	0.580	16.3	8.2	14	26	5.7	147.2	13.6
Timor-Leste	0.626	0.450	28.0	7.2	17	59	4.0	103.2	0.0
Lao People's Dem. Rep.	0.604	0.454	24.9	5.0	10	15	2.4	51.9	0.6
Myanmar	0.584	0.448	23.2	8.6	10	9	5.1	113.8	0.2
Cambodia	0.581	0.465	20.1	1.7	10	8	6.1	119.5	1.0

출처: United Nations, “The Impact of COVID-19 on South-East Asia”, Jun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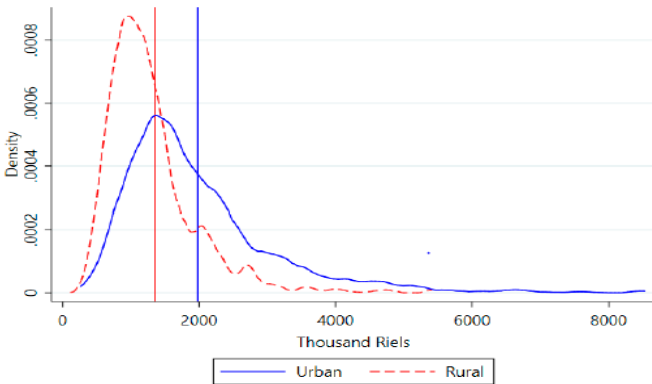
○ IMF 보고서²⁵⁾에 의하면,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8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반면, 농촌 지역의 평균 가계소득 및 소비수준은 도시 지역의 각각 60%,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향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평등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5) IMF, “Advancing Inclusive Growth in Cambodia”, September 2019. 도시 지역의 근로 소득(Salary income)이 농촌 지역의 약 2배에 달하며, 자영업소득도 1.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도시와 농촌의 월별 소득수준 비교



〈그림 6〉 도시와 농촌의 월별 소비수준 비교



자료: IMF, “Advancing Inclusive Growth in Cambodia”, September 2019

□ 국가 비상사태법 의결로 인권 및 언론 탄압 강화 우려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각국 정부의 사회 통제 조치가 계속 되는 가운데, 2020년 4월 캄보디아 국회는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국가 비상사태법을 의결하였음.

- 정부는 동 법안에 따라 전쟁, 외부의 침략, 공중보건 등에 의한 팬데믹, 기타 국가 보안 및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 발생시 국왕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이동·집회·외출·여행 제한, 공공·사적 장소 폐쇄, 국가질서를 해치는 정보 유통과 관련한 언론·통신 감시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특히, 위급상황시 계엄령 선포 및 군대 동원이 가능함.

○ UN 및 NGO 등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캄보디아 정부는 동 법안이 실제로 발효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였음. 그러나 동 법안에는 일몰조항이 없어,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에도 정부가 언론매체 감시, 반정부 세력 탄압 등에 활용할 여지가 있음.

- 실제로 지난 3월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정부는 SNS 또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유통하거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의문을 표명한 정치인, 언론인, 일반 시민 등 수십여 명을 체포하여 감금 또는 재교육 후 석방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서방 압력 및 무역특혜 축소에 대응한 협력관계 다변화 노력

○ 2018년 총선을 기점으로 서방 국가와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캄보디아의 親중국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음. 최근 수년 간 중국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원조자금 수혜 등을 매개로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매년 3천명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거행하는 등 안보 문제에서도 협력하고 있음.

-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전 세계 최초로 캄보디아 외교 사절이 중국 정부를 방문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협상 시작 후 약 6개월 만인 2020년 7월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었음. 동 FTA를 통해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95%는 무관세)을 받게 되며, 도로·병원·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문과 농산물 가공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도 기대되고 있음.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EU 및 미국에 편향된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는 2019년 9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역규모를 50억 달러 이상(2019년 30.8억 달러)으로 확대키로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 정부와는 2020년 중 총 4차례에 걸쳐 협상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교역품목 확대 및 통관 관련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어 FTA 체결을 추진 중임.
 - 2012년부터 캄보디아 등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²⁶⁾ 협상이 진행되었음. 2019년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합의했으며, 2020년 11월 체결을 완료하였음.
 - 한편, 지난 6월 일본은 교육 및 보건 인프라 개발을 위한 ODA(41백만 달러)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일본 이외에 영국,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호에 대한 서방 국가의 압력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얀마, 헝가리, 터키 등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훈센 총리는 2019년 미얀마(4~5월), 네팔(5월), 헝가리(6월·10월), 터키(7월), 스리랑카(8월)와 연이어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음. 다만, 이들 국가와의 교역투자 규모는 크지 않은 만큼, 경제협력 측면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서방 국가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동조세력 확보 측면에서의 외교적 노력으로 분석됨.

26) KOTRA,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2019년 11월. RCEP는 전세계 GDP의 32%, 인구의 48%, 교역의 29%에 달하는 규모의 FTA임. 단, 인도는 자국 농업 및 제조업 보호, 중국의 세력 확대 견제 등을 이유로 불참함.

□ EU, 미국 등 서방 국가와는 민주주의 진전 여부가 선결 과제

○ 캄보디아는 EU·미국의 무역 특혜조치에 힘입어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18년 총선을 전후한 정치·언론 및 인권 탄압으로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음.

○ EU는 2018년 10월 EBA 특혜 철회 가능성 언급 후 2019년 2월 18개월 간의 공식 검토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8월 12일 캄보디아 정부가 인권, 정치적 권리 보장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때까지 캄보디아 수출품 일부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잠정 중단함을 발표하였음. 한편, 2020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부실한 블랙리스트 국가 명단에 캄보디아를 포함시켰음.

- 캄보디아는 EBA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여 30억 달러 규모의 대응예산을 편성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수출비용 절감책을 단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자금세탁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법적·경제적 대응을 비교적 빠르게 실시하고 있음. 한편, 일부 정치인 및 언론인 석방 등의 화해 제스처도 취하고 있으나, 집권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EU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민주주의 진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 미국은 EU의 정치·인권 탄압 비판에 동조하고 있으며,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인해, 최근 중국과 경제협력은 물론 군사협력²⁷⁾을 강화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해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음.

- 2019년 2월 미국 상원에서는 캄보디아의 GSP²⁸⁾ 수혜 자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음. 동년 7월에는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입국 거부 등을 골자로 하는 ‘캄보디아 민주주의법’ 초안이 하원에서 발의되었으며, 12월 前 군부 총사령관 등 요인 13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발효됨.
-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지나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한편, EIU는 미국 입장에서는 GSP가 캄보디아를 제어할 수 있는 주요 압력수단인 만큼, 원조 삭감이나 추가적인 제재 조치는 가능해도 무역특혜를 철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의 정치·언론 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EU 등 서방 국가의 압박 또한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진전 여부가 서방과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7) WSJ는 2019년 초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 국경과 접해있는 Ream 해군기지 사용권한(최초 30년, 이후 10년씩 자동 연장)을 중국에 부여했다고 보도

28)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선진국이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 및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 미국은 2019년 말 현재 119개국에 GSP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채무재조정 이후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 지속

○ 파리클럽을 통하여 체결된 총 3건의 채무재조정 협약 중 1972년의 2건(1월·10월)에 대한 원리금은 전액 상환하였으며, 1995년 1월 채무재조정 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안정적으로 진행 중임.

- 1995년 1월의 채무재조정은 1985년 이전의 채무액 총 2.5억 달러에 대한 당감 및 리스케줄링에 관한 것으로, 비(非)ODA 부분은 2018년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ODA 부분 잔액에 대한 상환은 2035년 완료 예정임.

○ 2020년 3월 말 기준 캄보디아 앞 OECD 회원국 ECA 지원 잔액은 40.7백만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없음. 또한 IMF도 2019년 11월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Report에서 캄보디아의 단기적인 외채상환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표 18〉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행	D1 (2020.09)	D1 (2019.11)
OECD	6등급 (2020.06)	6등급 (2019.06)
Moody's	B2 (2019.10)	B2 (2017.03)

□ OECD, Moody's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2008년 6월 관광산업 호조, 외채관련 지표 개선, 높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캄보디아의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Moody's는 2007년 5월 캄보디아에 최초로 신용등급(B2)을 부여하였으며, 건조한 성장세와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존 등급을 지속 유지 중임.

VI. 종합의견

- 캄보디아 경제는 봉제품 수출, 관광객 증가 및 건설업 활황 등에 힘입어 최근 20년 간 7%대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성장세가 위축되고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2018년 7월 총선으로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정치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언론 탄압으로 EU·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음. 그 결과 봉제품 주요 수출지역인 EU의 무역제재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 타격 및 실업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 풍부한 잠재적 노동력과 유리한 입지조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은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 등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주력산업인 봉제산업의 경쟁력 저하, 부동산 붐에 따른 금융시장 과열, 최근의 중국 수출 감소 현상 등은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향후 정부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산업구조 및 수출시장 다변화, 서방과의 관계 개선,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발 노력 등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국가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주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

목 차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II.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2. 사회안정
 - 3. 국제관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 종합의견

I. 국가개황

1. 일반개황

면적	29천 km ²	G D P	16억 달러(2019년)
인구	64만 명(2019년)	1인당 GDP	2,494달러(2019년)
정치체제	영국식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Solomon Islands Dollar (SI\$)
대외정책	친서방정책	환율 (US기준)	8.17(2019년)

- 솔로몬 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 호주 북쪽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군도(群島)국으로, 입지 특성상 자연재해 관련 직·간접 비용이 높고 기후변화에 취약함. 삼림자원을 활용한 벌목업이 주력산업이며, 제조업 기반은 대체로 미비함.
-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영연방 국가로 내각제를 택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총선 결과 소가바레(Sogavare) 전 총리가 2000년 이후 4번째로 총리로 선출되었음.
- 1999~2003년 중 종족 간 갈등으로 정치·사회 불안이 심화되자 호주, 뉴질랜드가 주축이 되어 솔로몬 군도 지역지원단(RAMSI)을 파견하여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치안 유지를 지원한 바 있음.
- 최대 수출국이자 공여국인 호주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기준에 사회 전반에 걸쳐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던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함.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8. 9. 15 수교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겸임)
- 주요협정: 어업협정('80), 무상원조협정('12)

〈표 1〉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7	2018	2019	주요 품목
수 출	20,934	23,102	49,494	플라스틱, 고무, 기계류
수 입	9,728	9,751	9,966	농산물, 임산물, 목재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6건, 32,023천 달러

II. 경제구조 및 정책

〈표 2〉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6	2017	2018	2019 ^c	2020 ^f
경제성장률(%)	5.9	5.3	3.9	1.2	-5.0
GDP 규모(억 달러)	13.8	14.6	15.9	16.0	15.5
소비자물가상승률(%)	0.5	0.5	3.5	1.8	3.9
재정수지/GDP(%)	-4.2	-3.4	0.9	-1.7	-5.6
경상수지(백만 달러)	-49	-63	-48	-154	-176
경상수지/GDP(%)	-3.5	-4.3	-3.0	-9.6	-11.3
상품수지(백만 달러)	13	7	5	-32	-74
상품수출(백만 달러)	432	469	534	556	566
상품수입(백만 달러)	419	462	529	588	639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514	577	613	601	601
총외채(백만 달러)	264	377	324	351	N/A
총외채잔액/총수출(%)	44.2	59.3	44.7	54.9	N/A
D.S.R.(%)	3.8	4.0	5.6	2.6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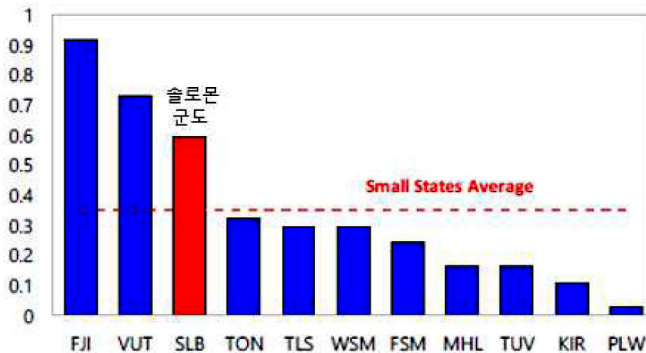
출처: IMF

1. 구조적 취약성

□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리적 환경

- 솔로몬 군도는 대양주에 위치한 소규모 군도 국가로서 태풍, 가뭄, 지진, 쓰나미,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1980~2016년 중 연평균 약 0.6회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겪었음. 이는 비슷한 환경의 주변국에 비해서도 빈번한 수준이며,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태평양 섬 국가들의 연평균 자연재해 횟수(1980~2016년)



출처: IMF

- IMF는 솔로몬 군도를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1980~2016년 기간 중 가장 큰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GDP의 14%에 달했으며, 2020년 기준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 수준은 경제성장률과 수출 규모를 각각 1.5%p, 3.5%p 하락시킬 것으로 산출됨¹⁾.

-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에 더해 임업과 농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작은 경제규모와 낮은 소득수준, 양적·질적으로 미비한 인프라 등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고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함.

□ 벌목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환경 훼손

- 1930년대부터 발달한 벌목업은 솔로몬 군도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서 정부 수익의 20%, 수출의 60% 및 외화 수취액의 32%를 차지²⁾하며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작간접적으로 벌목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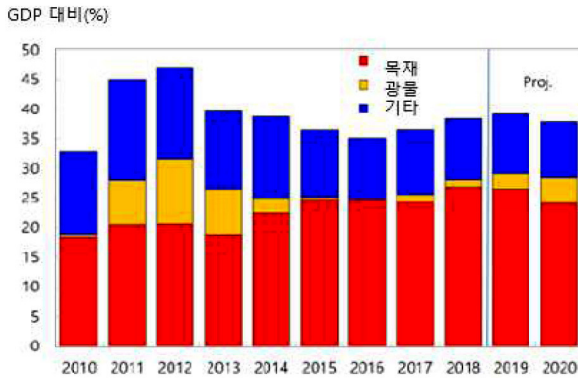
- 벌목업은 국가의 주된 수입원으로서 2006~18년 기간 중 연평균 15%씩 성장하였으며, World Bank는 솔로몬 군도의 벌목업이 삼림을 착취하는 속도가 지속가능한 수준의 17배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1)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2) Moody's, Credit Opinion, 15 September 2020

3)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그림 2〉 솔로몬 군도의 GDP 대비 수출규모 및 구성



출처: IMF

- 과도한 벌목과 광범위한 벌목도로 건설로 토양이 유실되고 하천과 바다가 오염되는 등 환경 훼손이 심각하며, 홍수 피해 확대, 농업 및 어업 산출량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동국 정부 역시 삼림자원의 고갈 속도가 재생 속도를 능가하여 지속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벌목업의 축소를 추진 중임.
 - 정부는 자원 부문에 대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벌목 규모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지속가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신규 벌목업체 및 삼림조합 비회원에 대해 벌목면허 발급을 중단한 상태임. 벌목업의 축소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벌목업을 대체할 산업 개발이 시급하나, 현재 솔로몬 군도에서 성장잠재력 있는 산업으로 꼽히는 관광업, 어업, 농업(팜유, 코코아

등) 부문은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이미 선도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성장잠재력

□ 교통, 통신, 전력 등 기본 인프라 미비

○ 군도라는 지리적 특성,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 부재와 재원 부족 등으로 교통, 통신, 전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 발달이 미비하여 투자 유치와 경제발전에 한계로 작용함.

- 국내 거주자 간 해상거리(sea distance)가 평균 200km 이상일 정도로 국토가 분산되어 있어 지역간 교통 연결이 어려우며, 통신과 전력 인프라도 미비하여 총인구 대비 인터넷 접근성이 약 12%, 전력 접근성이 약 60%에 불과함⁴⁾.

□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성장 가능성 잠재

○ 이사벨 주(Isabel province)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넓은 니켈 매장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신규 보크사이트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등 미개발 상태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원자재 수요 및 가격변동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입과 수출 증대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4)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 정부는 2014년 이후 채굴이 중단되었던 Gold Ridge 금광의 생산 재개를 위해 2019년 9월 중국국제철도그룹(China Railway International Group)과 8.25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약을 체결 하였음. 동 계약은 전력시설, 항만, 도로, 철도, 교량 등의 인프라 건설과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계약 하에 건설된 인프라의 소유권은 중국국제철도그룹 측에 귀속되는 조건임.

- Gold Ridge 금광은 2014년 홍수로 폐쇄되었으며, 당시 광산 운영을 맡았던 호주 광산회사가 이 일로 추방된 이후 생산이 재개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음. 동 광산은 한때 솔로몬 군도 GDP에 대한 기여도가 20% 이상이었을 정도로 주요한 자원이며, 시설 정비 후 본격적으로 생산이 재개된다면 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저 케이블 건설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 기대

○ 2018년 6월 솔로몬 군도는 호주와 총 4,700km 길이의 해저케이블 (Coral Sea Cable System)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7월 착공하였음. 이 중에는 솔로몬 군도 내 730km 구간(Honiara~Taro)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말 완공 예정임. 동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파푸아 뉴기니 및 솔로몬 군도는 각각 약 20테라바이트 (TB) 수준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해저 케이블 개통은 현재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양국의 인터넷 접근 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전자상거래 등 관련 산업 투자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해저케이블 경로



출처: Submarine Networks

□ 관광산업 발전을 추진 중이나 코로나19로 난항

○ 정부는 벌목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해왔으며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임.

- 2020년 1월 개최한 관광산업 포럼에서 소가바레 총리는 연간 9%의 방문객 증가율 유지와 ‘Low Cost-High Impact’ 전략을 강조하였으며, 관광부에서는 2019년 국교를 맺은 중국의 관광객 유치에 대해 중국어 마케팅 확대, 적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계획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솔로몬 군도의 관광산업은 소강 상태임. 솔로몬 군도는 2020년 10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발병 사례는 없었으나, 국내 확진자 수와 무관하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산업의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움.

3. 정책성과

□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해 경제개발계획 추진 곤란

- 2006년 이후 8차례 총리가 교체되었을 정도로 정치적 변동성이 매우 높고, 총선이 있는 해에는 몇 달 간 모든 정치 사안이 일시 중지될 정도로 정치 체계가 불안정하여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곤란한 여건임.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경기부양책 발표

- 2020년 5월,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3,800만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였음. 동 부양책에는 관광 업계에 대한 5년간의 세금 면제, 채무상환 유예, 작물 수출 관련 9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농촌 지역 소득 보조 등이 포함되었음.
 - 2020년 6월 1일 IMF가 2,900만 달러 규모의 긴급재정지원금을 지원하여 동 경기부양책 재원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으며

이외에도 다자개발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로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9년 선거 결과 소가바레 총리가 4번째로 총리직 취임

○ 솔로몬 군도는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국가 수반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임. 실질적 행정 수반인 총리의 추천을 받아 여왕의 대리인인 총독이 내각을 임명하는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4월 총선 및 총리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된 소가바레 총리는 이번이 4번째 총리 취임으로 직전 총리직 수행시 (2015~17년) 임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불신임투표로 퇴출된 바 있음.

- 2019년 총선에서는 50개 의석을 놓고 336명의 후보들이 경쟁하였으며, 선거 결과 무소속 후보자가 21석을 차지하였음. 소가바레 총리가 소속된 여당은 총선 승리 후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다수 영입하여 32개 의석을 확보하였음.

□ 소가바레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 솔로몬 군도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유착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소가바레 총리는 부총리 재임 시절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여 2018년에는 원조 수혜액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지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조카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과 방역이 우선시 되면서 올해는 관련 정책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음.

- 2019년 12월, 야당은 소가바레 총리의 조카이자 최고 비서관인 조코비치가 이사벨 주 니켈 개발과 관련하여 호주 광산회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뇌물을 수취하였다는 의혹을 제기 하면서 정부 최상위층에서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 하고 소가바레 총리의 거취 검토를 요구하였음.

□ 중앙정부와 말라이타 주 정부 간 관계 악화

○ 말라이타 주 정부는 중앙정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으며, 2019년 9월 실제로 중국과 수교한 이후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화되어 2020년 9월, 주민 투표를 통해 독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주 정부가 투표를 통해 독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주 정부와 중앙정부 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실제 주민 투표가 시행되어 독립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말라이타 주가 주권국가로서 독립된 경제력, 행정력,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시됨.

2. 사회안정

□ 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소요 경험, 불안요소 상존

○ 1999년 7월 수도인 호니아라가 위치한 과달카날 섬 원주민과 인근 말라이타 섬 원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폭력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2000년 6월 말라이타 원주민 조직이 수도를 포위, 총리를 감금하고 사퇴를 종용하였음. 호주와 뉴질랜드가 사태 해결을 위해 개입하였으며 말라이타 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6월 30일 총선을 실시, 야당 총재였던 소가바레가 총리로 선출되었으나 종족 간 폭력적인 소요 사태는 2003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졌음.

- 삼림 분포상 주력 수출산업인 벌목업이 과달카날 섬 위주로 발달하면서 말라이타 섬 주민들이 대거 과달카날로 이주하였으며, 타 지역 출신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과달카날 원주민의 불만과 자원 배분 및 이주민 배척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라이타 원주민의 불만이 갈등의 주원인이었음.

○ 종족 간 무력 충돌 방지, 내부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2003년 호주·뉴질랜드를 주축으로 파견된 '솔로몬 군도 지역지원단

(RAMSI)'이 2017년 6월까지 솔로몬 군도의 치안 유지를 지원 하였음.

- RAMSI 철수 후 첫 총선이 2019년 4월 실시되었으며, 선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호주와 뉴질랜드가 질서 유지를 지원 하였음. 선거 직후 호니아라에서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곧 안정을 되찾았음.

3. 국제관계

□ 호주와 긴밀한 우호관계 지속

○ 솔로몬 군도는 호주와 2017년 6월 '원조 동반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주는 동국 앞 원조 공여, RAMSI 파견 등 경제·사회 다방면에서 우호적인 지원을 지속해 왔음.

- 호주 입장에서는 대양주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솔로몬 군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2019년 7월~ 2020년 6월 중 호주의 동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1.17억 달러로 이는 2019년 솔로몬 군도 GDP의 7.3% 수준임.

□ 대만과 단교,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 솔로몬 군도는 대만으로부터 원조를 공여받는 한편 대만의 UN 가입을 지지하는 등 상호 협력해왔으나 2019년 5월 소가바레 정부가 대만과의 외교관계 재검토를 선언하였음. 이후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등 대양주 지역에서 중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구축을 추진한 끝에 2019년 9월 대만과 단교,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일대일로 협약을 체결하였음.
- 향후 중국 정부 및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기대되나 이와 동시에 채무 급증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자국의 이권을 우선시 하면서 솔로몬 군도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양국 수교 다음날 중국 국영기업이 동국 주 정부와 툴랑기 섬 (2차대전 중 일본이 해군기지로 사용하는 등 지리적 요충지)의 75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국 법무부는 이 계약이 불법이라고 판시함. 이외에도 Gold Ridge 광산 개발 계약을 수교 35일만에 체결하는 등 중국 측은 수교 직후부터 이권 획득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속적인 차관 지원

○ IMF는 솔로몬 군도 앞으로 2010~11년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Facility)*, 2012년 이후 1.5백만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등을 지원하였음. 또한 2014년 ADB는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15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였음.

*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회원국의 단기적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 저소득국에 대한 IMF의 중기적 지원수단으로, 지원조건은 이자율 0%, 상환기간 10년(거치기간 5.5년 포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 IMF는 최빈국 25개국을 대상으로 재해 억제 및 채무 경감 기금(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을 통해 지원금 상환을 유예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솔로몬 군도 역시 유예 대상에 포함되었음. 또한 2020년 6월 IMF는 긴급 재정지원을 위해 동국 앞 2,9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였으며, 7월 ADB 역시 2,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채무상환능력 지표는 양호하나 외부 대응능력 취약

- 2019년 말 기준 공공채무는 GDP 대비 10.1%, DSR 2.6%,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8.1개월 규모로 외채 관련 지표5)가 양호함. 그러나 대형 인프라 투자 증가, 목재 수출 감소와 대체 산업 개발 부진, 2023년 Pacific Games 개최 등으로 향후 채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원조 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함.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Moody's	B3 ('19.10월)	B3 ('17.10월)

□ 주요 신용평가기관 중 Moody's만 신용등급 부여

- Moody's는 2019년 10월 낮은 정부채무 규모, 주변국들의 꾸준한 대외원조 등 긍정적인 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및 목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 부정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신용등급인 B3를 유지함.

V. 종합의견

- 솔로몬 군도는 인구 64만명의 소규모 군도국으로, 국토가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어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경제성장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
- 주력산업인 벌목업의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지속가능성이 없어 국가 차원에서 축소 조정 중이며 광업, 농업, 관광업 등 잠재력 있는 다른 산업 부문이 아직 벌목업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외 수요가 침체돼 당분간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 2019년 4월 총선 결과 소가바레 총리가 선출되었으며, 불신임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매우 잦아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고 종족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 현재 외채 관련 지표가 양호하고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공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에 별 문제는 없으나,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함.

「한국의 개발협력」 원고 기고

□ 발간 목적

- 「한국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발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 원고 집필 요령

- 내용 및 작성 : 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 형식으로 작성
- 형식 : 한글파일 사용 (13 포인트, 200자 원고지기준)
-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

□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E-MAIL : donghee.yoo@koreaexim.go.kr, jyk@koreaexim.go.kr

Tel : 02-6255-5671

- 기고 원고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기고 원고는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

- 심사는 한국의 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또한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원고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게재

-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하며,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는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ttp://www.edcfkorea.go.kr>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